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시민사회 정책 제안서

- 일시 : 2026년 5월 20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대강당

2026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너머서울 · 서울WATCH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정치하는엄마들 ·
한국사회연대경제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약 60개 단체)

순 서

□ 정책제안 목록표	3
□ 정책제안 분야별 세부내용(가나다순)	
1. 교통	5
2. 문화	12
3. 민생 • 재개발	18
4. 생태 • 환경	25
5. 시민참여 • 예산	32
6. 아동 • 청소년	37
7. 여성 • 성평등	43
8. 장애	53
9. 풀뿌리 • 자치	60
10. 한강	69
11. 노동	73
12. 사회연대경제	76

※ 붙임 : 2026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민사회추진위원회 참여단체

□ 정책제안 목록

부문	정책 제안 내용	정책		제안 단체
			세부 과제	
교 통	<p>□ 안정과 형평 지속가능한 교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 수요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2.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태 도시 만들기 3. 버스 공공성 확보, 서비스 및 역할 강화 4.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확대 	4	13	녹색교통
문 화	<p>□ 퇴행하는 서울 문화정책의 혁신과 시민 문화권 회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 문화개발주의 탈피와 시민 문화권 중심 정책 전환 2. 지역문화 생태계 복원과 생활권 기반 문화 인프라 확충 3. 민주적 문화 거버넌스 구축과 문화행정 혁신 4. 문화 다양성과 소수자 문화권 보장 정책 강화 	3	12	문화연대
민생· 재개발	<p>□ 불공정 거래근절, 투명한SI 행정, 세운재개발재검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세입자 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 불공정 거래행위 대응 및 조사권·제재권 도입 2. 서울시 SI정책 정보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3.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원점 재검토 4.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및 공공선매권 도입 5. 세입자 권리 강화 : 주택임대차보호조례 제정 및 공정임대료제 도입 	3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너머서울
생태· 환경	<p>□ 에너지·쓰레기 자립과 생태전환 도시, 서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 에너지 자립 : 유희부지의 에너지 전환 2. 서울,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 3. 시민이 만들어가는 모두의 정원도시 서울 	4	16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 · 예산	<p>□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으로 여는 시민 주권 행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 2.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통한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 강화 	2	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아동· 청소년	<p>□ 아동·청소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서울, 환경권·건강권·평등권·행복 추구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산어린이정원 폐쇄 2. 아동·청소년 차별하는 노키즈존 없는 서울시 3. 아동·청소년 고당류 섭취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형 식생활 모니터링 체계 내실화 	3	12	정치하는엄마들
여성	<p>□ 사라진 여성정책 및 추진체계 복원·강화로 성평등 서울 실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기능 복원 및 강화 2. 성평등 정책 실행기관 복원 및 기능 강화 3.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 명칭과 목적 복원 및 운영체계 확대·강화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젠더폭력 방지 정책 마련 	5	19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5. 시의회, 구의회,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 예방			
장애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 1.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 및 일일운행 16시간 보장을 위한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확보 2.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 2023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3.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복원 4.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연계 사업 복구 5. 장애인도 시민으로 자립하는 민주주의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전수조사로 인한 시 추가 지원 탈락자 대책마련	5	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풀뿌리·자치	□ 시민주권 회복 및 공동체 회복력 강화 1.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를 통한 서울형 풀뿌리 자치 실질화 2. 풀뿌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기반 확충 3. 공동체 회복력 강화를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4. 서울시-지역기반 기후위기 대응 종합체계 구축 5.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서울, '서울시시민참여위원회' 설치	5	20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한강	□ 자연성 회복과 시민이 가꾸는 생명의 강, 한강 1. 한강 자연성 회복 : 교통 수단에서 생명의 강으로 2. 수영하는 한강, 시민이 가꾸고 운영하는 한강	2	9	·서울환경연합 ·한강 사회적협동조합
노동	□ 원청교섭 보장 및 산업·업종별 노동거버넌스 구축 1. 원청교섭 보장 및 지자체 모범사용자 책임강화 2. 산업단지 및 중소사업장 밀집지역 산업·업종별 노동거버넌스 구축	2	5	너머서울
사회연대경제	□ 사회연대경제의 자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금융·정책 생태계 구축 1. 현장 중심 민간 주도 지원 생태계 개편 2. 서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3. 사회연대경제 전담 행정체계 구축	3	10	한국사회연대경제
(합계)		41	125	

□ 정책제안 세부내용

1. 교통 안전과 형평, 지속가능한 교통

[녹색교통]

- 서울의 교통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320만대까지 증가했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2년 정점 이후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자동차 주행거리 또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 대중교통 이용 환경, 보행과 이동이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등 서울시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10년전과 큰 차이가 없다.
- 오히려, 전체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의존도는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 대중교통 : 65.9% → 64.4%, 승용차 22.9 → 27.8, 2013년과 2023년의 교통수단분담률
- 이는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지 않으면 이용수단의 전환(Modal Shift)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는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주요한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될 시기다.
- 자동차 이용의 억제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절약, 교통사고 감소, 교통혼잡비용 감소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추진이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 대중교통 개선과 함께 개인 승용차 이용에 대한 직접적 억제를 강화해야만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녹색교통수단인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수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① 제안 배경

- 세계 주요 도시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적극 추진 중이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Low Emission Zone(LEZ) 제도는 2019년 228개 지역에서 2022년 320개 지역으로 40% 증가했고, 2025년까지 507개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 정책은 시설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자동차 이용 억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가장 강력한 운행제한 제도인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은 현재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시 통행량의 단 0.4%만이 5등급 차량(2023년 기준)으로 대책의 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
- 서울시가 1996년부터 도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입한 혼잡통행료 제도는 우회도로 존재, 요금 동결, 선형 부과방식, 감면·할인 혜택 증가 등 개선 없이 30년 동안 유지되면서 그 효과가 상실되었고 결국 실효성 논란으로 2024년 외곽 방향 혼잡통행료 징수가 폐지되었다.
- 국내 처음 도입된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외 여의도·강남 일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20년 이후 추진 속도가 매우 부진하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 개편

- 운행제한 등급 확대 : 2030년까지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점진적 확대
- 운행제한 지역 확대 : 녹색교통지역에서 서울시 전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 운행제한 운영 통합 : 상시와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2단계 운영에서 상시 운영으로 통합 전환

[정책2] 강남·여의도 일대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녹색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

- 강남대로, 여의대로 도로 공간 재편 조속 추진

- 보행 공간 및 연계성 확보, 자전거 전용차로 확보, 도심 제한속도 5030,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등

[정책3] 혼잡통행료 시행 및 실효성 확보

- 혼잡통행료 대상 구역 확대 : 남산1·3호 터널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강남, 여의도)
- 선형 부과방식에서 지역 부과방식으로 변경
- 거주민 등 한시적 할인·면제 제도 운영 및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지원

1.2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태 도시 만들기

① 제안 배경

- 가장 기본적이고 완벽한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와 보행은 여전히 교통정책의 외곽에 존재하고 도시는 여전히 사람보다 자동차에 친화적인 교통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 보행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며 자전거는 도심에서 연계 교통의 역할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과거에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주요한 지자체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탄소중립 실천 등의 필요성으로 보행과 자전거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 2021년 정식 시행된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는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2024년, 정률제)와 모두의 카드(2026년, 정액제)로 확대 개편되었고, 서울시는 정액제인 기후동행카드를 2024년부터 시행하였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교통정책의 중심에는 보행과 자전거, 공유교통, 버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종합적인 인프라와 제도가 필요하나 각각이 연결되지 못한 채 개별 정책들이 추진되어 그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 서울시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에 비해 여전히 사망자의 35%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9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안전 위해 요인을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규모는 2010년 대비 100배 이상 (440대→45,000대) 늘어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며 레저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자전거 도로는 전체 도로의 11%에 불과(전국 평균 25.5%)하고 이 중 66%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자전거도 보행자도 불편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독일의 9유로 티켓(2022년)은 정액·정기권 방식으로 이후 49유로 티켓, 58유로 티켓으로 확대 변화하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공공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 할인제도는 이러한 전환 정책으로의 전략이 부족하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보행과 자전거, 공유교통, 마을버스 등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벨트 깔린 생태 도시로 전환

- 가로공간 재편을 통한 보도, 자전거 주행로 및 자전거 보관시설 확대 등 물리적 녹색교통 이용 공간 확대 : 연차별 확대 계획 수립 후 단계적 확대
- 시민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도시 안전망”을 구축 : 버스, 지하철역에서 집 앞까지 범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보행 안전 보안시설 확대, 눈과 비 그리고 땀별도 피할 수 있는 상가형 보행 아케이드 설치, 태양광 지붕형 자전거 도로, 보행 골목길의 1평 쉼터와 쌍방향 안전 CCTV 등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보행 안전 통행로 인증제도’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정책2] 운전면허 반납, 내연기관 차 조기 폐차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자전거 인센티브 제도 도입

- 고령자에게만 지원되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녹색교통수단 이용 인센티브로 지원
- 내연기관 차 폐차(등록말소) 시 신규 차량 미 구매자에 한하여 대중교통 할인권 또는 전기이륜차, 자전거 구매 바우처, 공공자전거 이용권 등으로 확대 지급

[정책3]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을 유도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와 활성화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

- 월 62,000보다 낮은 기준금액 도입(서울시 월평균 대중교통 비용 49,114원, 2024년 기준)
- K-패스(모두의 카드)와 기후동행카드로 이원화된 할인 제도 통합으로 국고 지원을 통해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 요금할인제도 강화와 버스 노선 확대, 대중교통 전용지구 신설, 버스 중앙전용차로 확대, 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등 대중교통 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 병행 추진

[정책4] 걷기 좋은 안전한 도시

- 보행자 전용도로 확대 : 보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행자 전용도로 점진 확대
- 차 없는 거리 확대 : 카프리 시클로비아 제도화하여 매주 일요일 25개 구 주요 도로 자동차로부터 해방되는 날 시민 체험 기회 부여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로 보행 안전과 쾌적성 확보

[정책5] 위협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무공해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전용도로 지속 신설 : 연차별 확대로 전국 평균(전체 도로 25%)이상 확보
- 대중교통 역사 주변 (전기) 자전거 보관 및 편의시설 확충
- 공공자전거 지속 확대

1.3 버스 공공성 확보, 서비스 및 역할 강화

① 제안 배경

- 대중교통의 핵심인 노선버스와 마을버스는 도시 내·외 이동, 지하철역 연계, 주거지 연결을 통해 시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대중교통 역할이 감소될수록 승용차 의존과 에너지 낭비가 심화되고 시민 생활의 불편과 비용을 증가시키며 대중교통의 운행 여건과 서비스의 악화는 혼잡, 주차, 사고 등의 교통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수입금공동관리제 방식이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지속적인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서울시는 최근 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발표했다.
- 근본적인 버스 산업의 문제는 제3자의 시장 참여를 불허하는 면허제로 보호받는 업종으

로 공정한 경쟁이 형성되기 어렵고, 시효가 없는 면허권은 상속 및 독점권 성격을 여전히 지닌다.

- 버스 산업은 면허 장벽으로 보호받는 대신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고,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교통의 주체이면서도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현재의 준공영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 날 수밖에 없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조례] 현행 수입금 공동관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입찰제 전환 도입

- 적자노선 중심에서 전체 노선으로 점진적 확대

[정책2. 조례] 버스 산업의 제3자 접근방안 마련

- 버스 면허제도의 점진적·단계적 개선으로 면허의 갱신 및 일몰 절차 추진
- 신설 노선 등 버스업체 인수 시 필요한 정책자금 융자
- 관광버스 및 타지 업체, 마을 기업이나 주민협동조합 등의 시장 참여 허용

[정책3. 조례] 버스업체의 위법행위 반복 시 면허 취소하여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한시적 사업명령제 또는 한시면허를 통해 제3자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며, 제3자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차량 등의 리스사업 등을 활성화

[정책4] 버스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와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요구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중교통 지원 계정 신설 요구
- 면허제 개선으로 공정과 경쟁의 재정투자 여건이 마련되면 탄소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투자, 운영업체가 아니라 이용 시민에 대한 지원으로 운영지원 확대 추진

1.4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확대

① 제안 배경

-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각 지자체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33)을 수립하였다.

- 수송부문은 전환을 제외하고 단일 배출원으로는 산업에 이어 두번째로 큰 배출량을 가지며, 이 중 감축량이 가장 높은 정책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보급 촉진이다.
- 내연기관 차의 친환경차 전환·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30년 누적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수소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세제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서울 실현을 목표로 2005년 대비 203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 2022년 기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두번째로 높은 분야는 수송(17.6%)이며 서울시 감축정책의 핵심 관리 대상으로, 감축 목표는 55.9%로 (기준연도 2005년 대비 2033년) 가장 높다.
- 서울시는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하여 민간 전기차 보급 촉진은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주행거리가 길고 감축 효과가 높은 버스, 택시, 화물의 무공해차 전환 실적은 부진하였다. (2024년 기준)
-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주는 충전 인프라 구축도 목표 대비 미달성하여 인프라 확충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도입 역시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한 정교한 친환경차 보급 전략 수립

- 노후 차량의 폐차 촉진 및 친환경차 전환지원금 확대 (30만원, 2026년)
- 버스(승합), 화물, 택시의 지방비 보조금 확대, 민간 무공해차 보조금 조정
- 버스, 화물, 택시 주차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충전 인프라 우선 설치 확대
- (조례) 내연기관 차 완전 퇴출, 내연기관 차 등록 중단 일정 고시 : 2035년
- (조례) 내연 차량 운행 제한 강화

- 민선 8기 서울시 문화정책은 대형 문화시설 건립과 관광 중심 개발 정책에 치중하면서 시민의 문화권 보장이라는 문화정책의 본래 목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생활문화 정책 축소, 사회적 약자 문화예산 삭감, 시민 참여 거버넌스 약화 등은 서울 문화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 이에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2.1

서울시 문화개발주의 탈피와 시민 문화권 중심 정책 전환

① 제안 배경

- 현재 서울시 문화정책은 대형 문화시설 건립과 도시 랜드마크 조성 중심으로 추진되며 문화정책이 도시 개발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문화정책의 핵심 목표는 시민의 문화적 권리보장이며 이는, 「문화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 서울시 문화정책은 시설 중심의 문화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적 권리의 전면화와 도시 운영의 문화적 비전을 만드는 방향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에는 이미 다수의 공연장과 문화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시기마다 대형 문

화시설 건립(노들 글로벌 예술섬,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제2세종문화회관, 이견희 기증관, 서울링 등) 공약이 반복되고 있다.

-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 정책은 막대한 건설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발생시키며 문화시설 간 기능 중복과 운영 비효율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반면 시민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나 문화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㉞ 정책 제안

[정책1] 서울시 문화시설의 전략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문화시설은 규모·기능·대상에 따라 성격이 크게 상이하므로, 모든 시설을 단일한 마스터 플랜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체를 획일적으로 통합하기 보다, 기본 방향과 공통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준의 설정과 각 시설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전략 목표를 수립하는 구조 필요
- 문화시설 관리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기 관리 지표 체계 구축 : 운영 성과, 접근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반영한 정기적 관리 지표 체계 구축
- 기후위기 등 사회적 위기 대응 기준 마련 : 기후위기, 재난 등 공통 위기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정책2. 예산] 문화예산 구조 전환 : 서울시 문화기금 조성

- 문화재정의 지속가능한 확충을 위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조성 검토 필요
- 서울시 출연금, 민간기업, 시민 참여 등이 결합된 혼합형 기금 구조 설계를 통해 재정 규모 확대뿐 아니라, 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참여 기반 강화
- 기금은 시민 문화활동,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문화시설 운영 및 혁신, 문화권 확대 사업 등 중장기 문화정책 목표와 연동하여 운용

[정책3] ‘서울 시민 문화권 헌장’ 제정 및 문화권 실태조사 지표 체계 고도화

- 기존 ‘문화권 선언’은 상징적 의미에 그쳐 행정적 강제력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조례’ 수준의 효력을 갖춘 ‘문화권 헌장’을 제정하여 정책 이행의 실효성 확보
-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유지하되, 문화 접근권, 참여권, 표현권 등 ‘문화권 관점의 지표’ 새롭게 개발하고, 나아가 조사-지표-정책이 상호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

① 제안 배경

- 문화정책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 민선8기 서울시에서는 생활문화센터, 마을예술창작소 등 시민 참여 기반 문화공간의 정책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역 문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시민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이 일부 축소되면서 지역 기반 문화 활동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 거버넌스 사업 축소 및 폐지,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폐지, 광역-자치구 협력 거버넌스의 부재 등)
- 또한 문화시설과 문화활동 기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남 및 도심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 내에서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동북권 등 일부 지역은 생활권 외부로 이동하여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이는 서울 내에서도 생활권 기반 문화활동 인프라와 접근성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격차는 단순한 시설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일상적으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의 차이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문화권 실현에 있어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생활문화 거점 공간 지원 확대

- 지역 기반 문화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마을예술창작소 및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안정성 확보(중장기 지원 체계 마련)’ 필요하며 단년도 사업 중심 지원을 넘어 상시 운영

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

- 인증형 생활권 마을예술창작공간 지원 사업 도입,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 권역별 핵심 거점 구축. 이를 통해 생활권 단위에서 접근 가능한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
- 서울예술치유센터와 같이 기존 핵심 시설의 기능 회복 및 재정비

[정책2] 10분 생활문화권 조성

- 동네 도서관, 연습실, 커뮤니티 문화공간 확충함에 있어 공공이 직접 조성하여 운영하기보다 생활권 내 자생적 형성과 확산을 유도하고, 공공은 촉진자나 지원자 역할로 전환
- 지역 상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상생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 분산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및 자원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 및 아카이빙 체계를 마련하여 물리적 확충을 넘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기반 구축

[정책3] 서울 지역문화 기획 인력 지원 체계 구축

- 문화 매개자 및 지역 문화기획자 양성 체계 구체화를 통해 단순 교육을 넘어 현장 기반 프로젝트 참여, 멘토링, 공공과 민간 협력 프로그램 등 실무 중심 단계별 양성 시스템 구축. 교육-실습-현장 배치로 이어지는 순환형 인력 양성 구조 마련
- 문화예술인 및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공공 프로젝트, 지역 기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문화예술 일자리 뉴딜, 문화돌봄 등) 확대하여 단기 사업 중심이 아닌 중장기 고용 구조 설계 필요
- 생활권 중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동 단위 문화매개자' 도입하여 지역 주민과 공간,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상시 활동 인력 배치

2.3 민주적 문화 거버넌스 구축과 문화행정 혁신

① 제안 배경

- 문화정책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예술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 문화정책의 민주성·투명성은 문화 생태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이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서울시 문화정책은 행정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화예술 현장과 시민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 문화기관 인사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시민 참여 문화 거버넌스 구축

- 시민·예술가·전문가 참여 정책 협의 구조 마련
-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실질적 참여 체계 구축

[정책2. 조례] 서울 문화 거버넌스 기구 설치

- ‘서울문화의회(가칭)’ 등 정책 협의 기구 도입
- 정책 자문을 넘어 의제 설정 및 의견 반영 기능 강화

[정책3] 주요 문화정책 수립 시 ‘시민참여 공론화’ 제도 도입

[정책4. 예산] 시민참여예산 내 문화부문 확대 및 별도 편성

-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내 문화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고 규모를 확대
- 이를 통해 시민이 직접 문화사업을 제안·선정·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거버넌스 논의가 실제 재정 권한과 연결되는 참여 체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2.4 문화 다양성과 소수자 문화권 보장 정책 강화

① 제안 배경

- 문화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문화 다양성과 문화 접근권 보장은 포용적 도시 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고령층, 이주민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일부 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또한 관련 정책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문화 참여 기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원체계 역시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소수자 문화권 보장 정책 강화

- 장애인, 이주민 등 문화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 확대
- 단편적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 체계로 전환

[정책2] 문화 접근성 개선 정책 확대

- 공공문화시설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 공공극장 및 공연장의 배리어프리 제작·운영 지원 확대(자막, 수어통역, 음성해설 등)

[정책3] 소수자 주도 문화 프로그램 지원

- 소수자 당사자가 기획·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 문화 프로그램 확대

[정책4] (가칭) 서울시 장애예술지원센터 설립

- 단순 시설이 아닌 지원 플랫폼형 센터로 설계하여 창작 지원, 유통, 교육, 네트워크,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 기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사업과 같은 성과를 참고하여 서울시 차원의 장애예술 지원 허브 구축. 분산된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장애예술 생태계 기반 마련

3.1 서울시 불공정 거래행위 대응 및 조사권·제재권 도입

① 제안 배경

- 서울에는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견·중소기업,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가맹·유통업·대리점·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사와 제재 권한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서울시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가맹사업 등의 피해 상담, 법률 지원,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상담과 분쟁조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사 역시 실태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불공정 문제의 시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지자체에 일정 부분 위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개정되었고 일정부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2023. 6. 7)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넘어선 조사권과 제재권도 지자체에 이양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제재가 어렵다면 조사권이라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1. 19.>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여 피해 사실이 접수되어도 강제적인 조사권(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이 없어 사업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사건 해결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도 실질적 제재가 어려워 동일한 피해가 지속되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가맹사업과 대리점은 물론, 지역기업 간 하도급, 유통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맹과 대리점업은 본사와 점주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존재하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조사권 없이 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강제 조사권을 가진 공정위는 대부분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문제와 전국 단위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서울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서의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에서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⑥ 정책 제안

[정책1] 공정위와 지자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제재권 단계적 도입

-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중앙정부(공정위)와 논의하여 지자체에 조사권을 이양하는 시행령 개정(가맹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 서울시의 불공정행위 조사권한을 가맹사업법·대리점법·유통산업발전법·하도급법에 부여
- 서울시 등 지자체 제재권(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단계적 도입

[정책2] 공정위와의 불공정행위 사건 이관, 공동조사 체계 강화

- 서울시에서의 조사를 통해 심각한 문제 발견 시 공정위로의 신속한 이관
- 서울시 조사만으로 어려울 경우, 공정위 공동 체계 강화

[정책3] 서울시 플랫폼기업 불공정행위 상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배달앱, 온라인 중개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 등 모니터링

3.2 서울시 AI정책 정보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① 제안 배경

-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임기 동안 다양한 정

책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이행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역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 AI 인재 양성과 투자, 스마트도시, 행정효율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모두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전반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AI의 활용과 활성화는 시민들 모두의 관심사가 될 만큼 사회적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러한 AI 정책이 바로가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투명한 공개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부작용을 줄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도 상시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AI의 활성화는 디지털 또는 산업 전환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 관련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물론, 관련 기술과 정보, 자본의 유무에 따라 기업 간, 사람 간 많은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와 각 부처, 산하기관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 또한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중복투자를 비롯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AI 정책은 중앙정부 부처 간 칸막이 문제로 인해 여전히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고 있고, 예산 또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불투명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역시 AI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 AI 정책의 특성상 알고리즘 활용, 데이터 수집·활용, 개인정보 보호 등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 감시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서울시 AI 정책 포털 개설

- 추진되고 있는 AI 정책, 예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사업별 예산 규모, 수행 기관, 추진 일정, 성과, 주요 내용 등)
-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 현황 공개
- 서울시민의 AI 정책 아이디어 상시 공모(교육, 사업 등)
- 서울시 AI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정책2] 서울시 AI 정책 민관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 서울시의 AI 정책 관련 타당성, 윤리성, 개인정보 보호 등 정기적 점검
- 서울시 관련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

3.3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원점 재검토

① 제안 배경

-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은 세계문화유산 종묘와 인접해 있고, 서울 도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왔다. 종묘일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문화유산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 경관에 대한 엄격한 공공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 조례 개정 효력이 인정되어 종묘 인근 142m 초고층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유산청도 2026년 1월, 서울시의 최고 높이 145m 이하 상향 고시를 전제로 종로구가 추진한 세운4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에 대해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세운지구는 장기간 정비사업 지연과 정책 기조 변경을 겪으며, 주민과 상인,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누적되어 왔고, 재개발 본격화 과정에서 공동체 해체와 임차 상인 퇴거 등으로 사회적 비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는 개발 방식은 재고할 필요도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가 제출한 「세운지구 구역별 개요 및 추진현황」에 따르면, 세운지구는 총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사업 완료, 7개 구역이 추진 중, 16개 구역이 준비 단계에 있다. 이미 상당 부분이 고층·고밀 개발로 진행되었고, 향후 전역이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660%~940% 수준이지만,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대폭 상향되었다. 일부는 지상 50층 이상, 높이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과 연면적 20만~48만㎡ 규모의 대형 업무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당초 도심 재생 취지와는 다른 초고밀 복합개발 문제가 존재한다.
-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환수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 전후 개발이익을 비교한 결과, 상향 후 총수입은 3조 3,465.1억 원으로 상향 전 추정치 2조 1,338.7억 원보다 1조 2,126.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지출은 상향 후 2조 9,803.0억 원으로 상향 전 추정치 2조 3,192.3억 원보다 6,610.7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개발이익은 상향 전 추정치 -1,853.6억 원에서 상향 후 3,662.1억 원으로 전환되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증가분은 5,51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개발이익이 주민과 상인들은 배제되는 구조하에 특정 기업과 대규모 토지보유자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세운지구는

용적률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왔지만, 이에 따라 늘어난 개발이익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얼마만큼 공공에 환원되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종묘 앞 세운지구의 재개발은 서울시의 도심 재개발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의사결정의 투명성, 정보 비대칭, 개발 이익 귀속의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 종묘 인접 초고층·초고밀 개발계획과 관련한 행정절차 중단 후 원점 재검토
- 특혜성 규제완화 중단과 공공 이익과 미래세대 위한 종묘 문화유산 보존

[정책2] 용적률·높이 완화의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 전면 공개

[정책3] 개발이익의 귀속, 공공환수 장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적정성 재검토

[정책4] 문화유산 보호 중심 개발 기준에 대한 재정립

3.4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및 공공선매권 도입

① 제안 배경

- 서울의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68.9%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서울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서울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 주택의 7.7%에 불과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됨.

② 현황 및 문제점

- 주거빈곤가구 비율이 20% 전후로 높은 관악, 용산, 광진, 종로 등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지만, 그 비중은 1~3%대로 서울시 평균보다 매우 낮음
- 서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택지가 부족한데, 공공부지 개발에서 조차 민간 매각을

통한 분양주택 건설 비중이 높고, 생활권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 공급이 부족함

- 특히, 연간 5~6천 호 공급되던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은 오세훈 시정에서 공급 실적 미달과 공급 계획 축소가 반복되어 연간 1~2천 호 수준으로 공급이 급감함

③ 정책 제안

[정책1]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설정·확보(공공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 서울시는 자치구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편차가 크고, 주거빈곤율과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많음(관악, 용산, 동작, 광진, 종로 등)
- 2030년, 2040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서울시와 지자체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계획 수립, 실행 강제력 부과, 인센티브 연동 방안 등을 서울시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함. 이를 통해 총 주택의 15%~2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정책2] 기존 주택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선매권' 도입

- 기존 주택을 매입해 도심 생활권 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선매권제도를 도입·시행함
- 공공선매권제도는 민간 소유 부동산이 매각될 때, 지자체가 제 3자보다 먼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프랑스 파리시, 독일 베를린시 등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임. 민간이 주택 매각 시, 1차로 개인에게 매매가 금지(매도의향서를 시에 먼저 제출해야 함)되며 시정부가 우선 매입권을 갖는 정책임. 시정부가 매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3.5 세입자 권리 강화 : 주택임대차보호조례 제정 및 공정임대료제 도입

① 제안 배경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향상은 단기적인 성과를 이루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20% 이상으로 재고율을 향상하더라도, 상당수의 서울시민은 민간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함. 하기에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금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② 현황 및 문제점

- 전월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인,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1회 갱신권 및 신규 임차 규제 제외 등으로 한계가 있음
- 서울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입자 비율이 높은 도시임.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가장 크고 전월세 증가폭이 컸으며, 세입자 주거불안이 심각해 민간 임대차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통한 규제와 세입자 권리 강화 중심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㉔ 정책 제안

[정책1] 서울시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가) 제정, 임대료 동결 및 상한 제한 설정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
- 서울시는 '상가임차인 보호조례'가 있고,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만 있음
-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전월세 폭등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0%로 동결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인상률은 5% 이내에서 물가/소득 인상률 등과 연동해 더 낮출 수 있도록 함

[정책2] 서울형 공정(표준)임대료제도 도입

- 임대차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주택 유형 및 품질, 입지 특성, 설비의 기능 등에 따라 임대료가 적정하게 설정·증감될 수 있도록 서울형 공정(표준)임대료 체계를 도입함
- 공정(표준)임대료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비교임대료나 표준임대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갱신 임대료 조정 시 당사자들 사이에 임대료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공정(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임대차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주택 유형 및 품질, 입지 특성, 설비의 기능 등에 따라 적정 임대료 설정·증감될 수 있도록 공공(표준)임대료 체계 도입

- 서울은 지난 몇 년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각종 수변·랜드마크 개발로 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책무에서 점점 멀어졌다. 2030년 기후 임계점을 앞둔 지금 이 역행을 멈추고 도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강과 도시 녹지는 관광·부동산 개발의 배경이 아니라, 폭우·홍수·폭염에 대응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이자 시민 모두의 생명선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력자립률 10% 수준에 머문 서울을 공공이 주도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분산형 에너지 자립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공공부지·유희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협동조합, 서울에너지공사, 거버넌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 지원을 강화해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둘째,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장 증설과 민간 위탁에 기대는 임시처방이 아니라, 일회용품 감축·재사용 확산·고품질 재활용·식품부산물 자원화로 이어지는 발생 원천 감량 - 자원순환 구조로 폐기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품목별 분리배출·수거·선별 체계 고도화, 수리·공유 인프라 확대, 리필·재사용 시스템 마련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서울을 '쓰레기 외주화 도시'가 아닌, 책임 있게 스스로 처리하는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현재 정원도시 정책이 기존 녹지 훼손과 초고층 개발의 그린워싱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시 녹지를 개발의 보상 수단이 아닌 기후·생태 인프라이자 시민 공동의 권리로 재위치시켜야 한다. 수관피복률 목표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도시의 30%를 나무 그늘로 덮고, 남산·한강·아파트숲 등 공공·민간 녹지를 보호·연결하며,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숲 돌봄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모두의 정원도시가 가능하다.

- 이러한 생태·환경 공약은 개발과 편의 중심 서울시정을 기후위기 대응·생태회복·공공성·시민참여에 기반한 생태전환 시정으로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다음 서울시정이 '기후 골든타임'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이다.

4.1 서울 에너지 자립 : 유희부지의 에너지 전환

① 제안 배경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도시 차원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서울은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도시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결합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발전 설비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와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약 10% 수준으로 낮은 상태이며 수년째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이다.
- 재생에너지 정책이 민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공공부지와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존재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③ 정책 제안

[정책 1]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정책

- 민간 자가용 태양광 지원사업 복원 : 피크시간대 전력부하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시민이 직접 실천하는 민간 자가용 태양광 지원사업을 복원
- 소규모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정책 추진 :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 유희부지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협동조합에 태양광 잠재량 조사를 지원하여 발전부지 확보에 기여하고 시민참여를 이끔. 공유지 허가 문제로 태양광 발전 설치가 무산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구가 소유한 공공부지는 입찰을 통해 부지발굴, 허가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태양광 패널의 기둥면적, 전기 설비 등을 제외한 임대료 산정으로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실화
- 수익성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사업성을 보완하

고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형 FIT 재정지원 정책 마련.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저리융자로 소규모 발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공부지에서 추진되는 발전수익의 일부분을 기여금으로 책정하여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조성

[정책 2] 시민참여·공공성 확보 정책 제안

-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기준 강화 - 유휴부지 확대까지 : 기존 법안(신재생에너지법)의 주차장 80면 기준을 넘어 50면 이상으로 확대하고, 50면 이하의 주차장에 대한 방향도 마련하여 보다 앞선 에너지전환 실행
- 공공성 및 시민참여 강화 : 에너지생산에 대한 시민참여 방식을 보장하여 시민수용성을 확보한다. 발전수익 일부를 에너지바우처, 기후대응기금(에너지기금) 등 기존 정책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에너지빈곤층,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냉난방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중립 교육사업 등에 사용하여 공공성을 확보
-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한 재원 마련 :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사업' 항목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비용 및 관리 재원으로 해당 특별회계를 활용.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 공영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

4.2 서울,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

① 제안 배경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폐기물 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폐기물 정책은 단순 처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발생 억제와 재사용 중심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국제적 정책 흐름이다.
- 종량제 시행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폐기물 정책 역시 자원순환 중심 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직매립 금지 대응 정책이 소각시설 확충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재사용 인프라 부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재활용 선별 체계와 분리배출 체계의 한계로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③ 정책 제안

[정책 1] 발생 원천 감량 및 재사용 생태계 구축

- 일회용품 규제 대폭 강화 및 공공 부문 선도 : 서울시 및 산하 기관 및 운영·관리 시설 전반 내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학교·한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 배달 일회용기 금지하는 '제로플라스틱존' 확대. 공공기관 주관 500명 이상 운집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민간 행사의 경우 감량 계획 및 결과 보고 의무화
- 다회용기 및 리필 문화 안착 : 경기장·장례식장·대학교 등 폐쇄형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전환 확대 및 초기 세척비 지원. 제로웨이스트 매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리필 생태계 활성화
- 수리 및 공유 인프라 확대 : '수리권' 보장을 위한 수리 조례 제정 및 통합 수리 정보 플랫폼 구축. 동네 수리점 연계 및 '수리카페'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 제품 수명 연장 문화 확산

[정책 2] 재활용 및 분리배출 체계의 정교화

- 품목별 배출 체계 혁신 : 종이팩(멸균팩 포함) 분리배출함 설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재생 휴지 구매 의무화. 커피박, 폐식용유, 폐현수막 등 신규 자원화 가능 품목의 배출 체계 마련
- 수거 및 선별 시스템 고도화 : 재활용품 수거 시 비압축 차량 교체 및 선별 시설·표준 공정 도입으로 선별률 제고.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재활용 정거장 및 무인회수기 수거 체계 확대 및 인센티브 시행

[정책 3] 대형·전자 및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

- 통합 배출 시스템 구축 : 대형폐기물 배출-수거-처리를 실시간 확인하는 '서울시 통합 배출 신고 앱' 구축. 소형 가전 및 폐전선 상시 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함 확대 및 안내 가이드라인 정비
- 식품부산물 전과정 관리 : 음식물 쓰레기를 '식품부산물'로 재정의하고 공유 냉장고·기부 모델 확대 등 발생원 감량 우선 추진. 감량기 확대 정책 성과 및 개선점 파악, 다량 배출사업장의 경우 RFID 기반 중량계량 방식 도입 확대. 식품부산물을 등급별로 구분해 식품화, 사료화, 퇴비화, 에너지화 순서로 자원화하는 체계 구축

[정책 4] 처분 단계의 관리 고도화 및 법제 마련

- 종량제 봉투 관리 강화 :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배출 원가에 부합하는 비용 체계 마련 및 봉투 내 RFID 칩 삽입으로 배출 경로 추적.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 '전처리

선별 시설'을 도입하여 소각되는 재활용 자원 차단

- 순환도시 거버넌스 및 법제화 : (가칭)'서울특별시 순환도시 전환 촉진 조례' 제정으로 감량·재사용·수리를 중심으로 조례 전면 개편. 서울재활용플라자를 '서울시 자원순환공사' 또는 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4.3 시민이 만들어가는 모두의 정원도시 서울

① 제안 배경

- 서울시는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녹지 훼손 및 경관 중심 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도시 녹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도시 인프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 시민 참여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 녹지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원도시 정책은 보여주기식 조경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 녹지 정책이 초고층 개발의 면죄부로 작용하며 도시 녹지의 생태적 연속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 시민 참여 기반 녹지 관리 정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③ 정책 제안

[정책 1] 도시 난개발 중단 및 공공성 회복

- 남산 곤돌라 설치 중단 및 공공성 회복 : 남산에 생태적 부담을 주는 신규 곤돌라 사업 백지화. 제도운송법 개정을 통해 기존 민간 사업자의 영구 독점 면허를 회수하고 공공이 주도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문제 개선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사업' 백지화 : 서울시가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은

도심권 녹지 확충을 명분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과도하게 상향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초고층 난개발 정책. 이는 경관을 사유화해,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할 조망권을 소수의 고층 입주자가 독점하게 됨. 서울 도심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적 특성을 파괴하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과 역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심 관리 원칙을 수립

[정책 2] 도시의 30%를 나무가 덮는 서울

- 수관 피복율(Urban Tree Canopy) 목표지표 도입 : 도시공원 면적과 정원의 숫자로는 도시 녹지의 기후 대응 효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공원 면적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음. 유럽, 미국 등 선진국 도시에서 사용하는 나무의 수관 피복율(Urban tree canopy, 나무그늘 면적) 지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이를 30% 달성하는 목표를 세우며 순증 총량제를 운영
- ‘도로 다이어트’와 거리 정원 조성 : 도로의 순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로 차선을 단계별로 줄여 나가야 함. 도로 중심 공간구조를 혁신해,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중앙 분리대 녹지와 가로수 생육 공간을 넓히고 거리 정원을 조성
- 공공 아보리스트 정책으로 가로수 수관 관리 : 프랑스 파리처럼 서울시에서 수목관리 전문기술자를 등용하고 나무의 생애주기와 생리에 맞게 관리해 가로수 수관을 건강하게 만듦
- 토심 기준 및 뿌리보호 강화 : 인공 지반 조경에서 최소 토심 기준을 현행 1m에서 1.5~2m로 상향하고, 뿌리 보호 구역 제도(TPG)를 도입해 공사 시 나무를 보호
- 아름드리 나무 조례 제정 및 등록제 운영 : ‘아름드리 나무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에 크고 오래되고 아름다운 나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 아름드리 나무 등록제를 운영하여 아름드리 나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큰나무 보호와 생육관리를 지원

[정책 3] 민간 녹지 공공성 강화

- 관리 사각지대 사유지 도시숲 지원 강화 : 공동주택, 대학 캠퍼스, 공개공지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공 기능이 강함.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지 도시숲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례를 개선해 협력 정책을 마련. 전담 부서를 개설하여 녹지관리 통합서비스를 지원
- 공개공지 연결 및 공공 관리 체계 구축 : 공개공지 녹지·수목 현황과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 점검하여 원상회복, 기부채납, 협력관리 등을 공공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현재 개별 건물마다 점으로 흩어진 공개공지를 인접 대지와 연계하여 선형(Line) 녹지축으로 재배치하고, 통합적으로 관리
- 재개발·재건축 시 기존 수목 보전 강화 : 토지이용계획 초기 단계에서 생태·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무가 있는 장소를 공원이나 조경 녹지로 지정. 수목활용계획 수립 시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나무나눔공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많은 수목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강화

- 개방형녹지의 그린위성 방지 가이드라인 : 녹지 확보를 빌미로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방형녹지의 '실질적 개방성'과 '녹지 기능(기온 저감, 투수량 등)' 및 '시민 편익'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인센티브 혜택에 관한 녹지 서비스 기능을 감독

[정책 4] 빗물을 품는 도시

- 지하 개발 총량제 : 지하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심도 터널 등 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은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지반을 침하시켜 시민 안전을 위협. 도심 지하 개발의 생태적 한계 용량을 설정하고 총량제로 관리
- 투수 도시 선언 : 주차장, 광장, 보도 등 불투수 포장을 전면 걷어내고, 빗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과 빗물정원을 도시 기반시설의 기본으로 삼음
- 생태면적을 산정방법 개편 : 생태면적을 산정 시 자연지반녹지·수공간 가중치를 대폭 상향하고 인공지반녹지·옥상녹화·벽면녹화 가중치를 하향해 토양과 물순환 기능을 효과적으로 평가

[정책 5] 시민이 직접 돌보는 정원

-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시 생육환경개선·사후관리계획 강화 : 서울시 25개 자치구 2025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서 '생육환경개선'은 정보가 가장 불충분했고 사후관리계획은 도시숲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한 자치구는 한 곳도 없음. 가로수 수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성·가지치기 위주로 수립하는 계획에서 생육환경개선·사후관리계획을 강화해야 함.
- 공동체정원·도시텃밭 등 시민참여 녹지조성 활성화 : 2020년 1억 3천만 원이었던 정원 박람회 예산은 2025년 19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한 한편, 13억 원이었던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예산은 2025년 0원으로 전액 삭감. 공동체 육성의 장으로 활용되는 생활 밀착형 공동체 정원·도시텃밭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함

[정책 6] 비인간 권리 법적 인정

- 철새보호구역 국가 '보호지역' 지정 :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중랑천·안양천·청계천 철새보호구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한국보호지역 DB통합관리시스템(KDPA) 및 세계보호지역 DB(WDPA)에 제출·등재 필요
- 철새·가로수, 서울형 생태법인 지정 :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는 페루의 도시 나우타에서 토착 무침벌에게 '존재하고 번성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듯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시장이 특정 생태계·생물종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서식지 변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철새,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가로수를 시범적으로 서울형 생태법인으로 지정

- 서울시 각종 위원회는 도시계획·재개발·환경·복지·안전·예산 등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한 조례일 뿐, 시민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열어놓는 조례가 아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중심으로 별도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
-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었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2021년 이후 제안 건수와 편성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자치구와의 협력 구조마저 단절되면서 실질적 시민 주권은 형식만 남은 상태다. 예산 과정에서 시민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도를 전면 정상화해야 한다.
- 서울시 예산·재정 정보는 홈페이지에 분산 공시되고 있으나, 시민이 실제로 찾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는 갖춰져 있지 않다. 시의회 제출 전 예산안 사전 공개, 시민 대상 공청회, 재정 정보의 통합 공시,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으면 참여는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 위원회 회의 공개, 예산 편성 과정의 사전 공개와 정보 통합, 참여예산 정상화는 각각의 제도 개선을 넘어 하나의 원칙으로 연결된다.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민에게 충분히 열어두고, 시민이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한 시민 주권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5.1

서울시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

① 제안 배경

-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는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환경, 교통, 복지, 안전, 인허가,

예산 등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이다.

- 그러나 중요한 결정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짐에도, 시민은 언제 회의가 열리는지,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 현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위원회 조례)는 목적부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맞춰져 있고(제1조), 위원회 설치요건·설치절차·구성·존속기한·운영평가 등 관리 규정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 즉 현행 조례는 위원회를 잘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아직은 시민에게 회의를 열어놓는 조례는 아니다.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현행 설치·운영 조례의 일부 보완을 넘어,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중심에 둔 별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신설할 필요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의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정비를 관리하는 조례로서는 정비되어 있으나,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회의공개 조례로 보기에는 한계가 크다. 구체적인 한계는 아래와 같다.
 - 시민 대상 사전고지 부재 : 서울시 조례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10조 제1항), 시민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공개 원칙은 있으나, 시민이 회의가 열리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 시민 방청 불가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제10조 제2항), 일반 시민의 방청 절차와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개회의를 시민이 실제로 방청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고 입장할 수 있는지, 질서유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 비공개·예외 사유가 넓고 사후 통제가 없음 : 서울시 조례는 “긴급한 사유”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으면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규정이 있으면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5항 단서). 그러나 이런 예외를 썼을 때 시민에게 사후적으로라도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 회의록은 공개하지만 책임성은 제한적 : 서울시 조례는 회의록 작성·보관과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제10조의2 제5항 단서), 비공개 정보도 폭넓게 허용돼(제10조의2 제6항)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떤 책임 아래 결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 위원 명단 공개 의무가 불명확함 : 현행 조례는 위원 임기, 중복위촉 제한, 연임 제한, 성별 비율, 청년 위촉 비율 등 위원 구성 관리 기준은 상세히 두고 있다.(제8조). 반면 위원 명단을 시민에게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민 검증보다 내부 관리 기준이 앞서 있는 구조이다.

○ 서울시 현행 조례는 위원회를 설치·운영·정비하는 데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시민에게 회의를 열어놓는 데는 한계가 크다. 시민 대상 사전고지, 방청권, 비공개 사유의 엄격한 통제, 위원 명단 공개, 책임성 있는 회의록 공개 장치는 미흡하다. 따라서 현행 ‘설치·운영 조례’와는 별도로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조례] 현행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로,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제정.

- 핵심은 위원회 관리가 아니라, 시민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열어두는 데 있음
- 회의의 사전 고지 대상을 시민으로 확장
- 시민 방청 제도화
- 회의록 공개 수준 강화
- 위원회 명단 공개 상시 의무화
-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

5.2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강화

① 제안 배경

- 한국은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면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참여예산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권한은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모사업 제안, 집행모니터링, 결산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인 운영과 가장 큰 참여 규모를 자랑하였으나,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급속도로 제도 운영이 후퇴하였다.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지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53번 과제), 지난 2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 2026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는 광역-기초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은 사업의 조정·지원, 기초는 사업의 실질적 집행을 담당할 협업 모델을 제안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규모의 축소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되는 제안사업건수는 2019년 3,511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하락하였으며, 2025년 제안사업 건수는 614건으로 19년 대비 17.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예산규모 또한 2019년 약 599억 원에서 2025년 13억 원으로 2.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시민제안사업의 규모와 편성예산의 감소로 인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제도적 형식만 남은 상황에 처해 있다.
-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구조의 후퇴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는 2021년 500명까지 확대하였으나, 22년 1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 기준 200명 수준으로 이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축소로 인하여 집행 모니터링 및 차해년도 예산에 관한 주민의견서 작성과정이 함께 간략화 된 반면, 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시민 엠보팅 반영 비율에서 일반 시민은 감소('21년 70%-'26년 20%)했으나 위원회의 영향력은 증가했다.('21년 20%-'26년 40%).
 -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2024년 관련 조례에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자치구 협업 구조 단절
 - 공모유형의 자치구 지원형(구단위 협치사업)삭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제안사업 이송 체계 작동이 불가하다.
 - 조례상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기구로써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회의 역할에 대한 조항 삭제, 광역-기초 간 제도 협력 근거가 사라졌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규모 확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위원 확대(300명 이상) 및 편성 예산규모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제안 활성화 방안 마련(연간 500억 원 규모)
- 제안사업 선전을 위한 온라인 엠보팅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확대 및 일반 시민 비율 확대(현행 20%→50% 이상)
- 2022년부터 단절된 자치구와의 참여예산 연계 구조 복원 및 광역-자치구 간 제안사업 이송 체계 확립

[정책2]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기구 확대·개편 및 지원체계 복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 확대를 통한 주민의견서 작성·집행 모니터링 강화 및 결산 과정 참여를 위한 신규 분과 구성으로 예산 전 과정에 관한 참여구조 확립
-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복원을 통한 운영방향 및 제도개선을 위한 환류 과정 구축
- 홍보분과 구성 및 시민참여예산 연간 백서 재발행을 통한 시민인식 제고 및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모범 사례 보급

[정책3] 서울시 예산과정에 관한 시민 접근성 확보

- 시의회 제출 전 예산안 사전 공개 및 시민 대상 예산 공청회 운영을 통해 예산안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보장
- 시 홈페이지에 분산된 예산·재정 관련 공시 및 자료를 서울시 재정포털로 일원화하여 시민 편의성 향상 도모
- 예산 및 재정 계획 수립(예산편성방안 설문,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및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을 강화(간담회, 공청회, 설문 등)하고 운영 과정과 결과 공개 강화

[정책4]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선정 과정에 관한 시민참여과정 강화(추가 고려)

- 일정 규모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및 의견수렴 결과 공개 의무화
- 주요 공약 사업 및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에 관한 추진현황 공개
- 시민 옴부즈만 제도 등 시민참여형 감시기구를 활용한 투자개발사업에 관한 사후 모니터링 및 감시제도 확립

- 용산어린이정원 폐쇄는 서울이 아동친화적인 도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표 용산어린이정원의 오염, 졸속 개방, 국민 안전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제염 책임이라는 정치적·외교적 문제 앞에 아동의 건강권을 방기했다. 서울시가 아동 건강권을 위해 용산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자체 모니터링 및 정화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
- 노키즈존은 2014년 이후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17)와 UN아동권리위원회(2019)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규정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전국 500여 곳 이상의 노키즈존이 카페·식당을 넘어 숙박업소·오마카세 등으로 확대됐다. 연령 기준도 법적 근거 없이 업주 재량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공공장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경험하고 배울 권리를 차단당하고, 출산 장려 정책과는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노키즈존 금지 원칙을 명시한 조례 제정과 공공기관·공공부지 내 노키즈존 전수조사 및 운영 금지, 업소 내 아동 사고 배상책임보험(웰컴키즈안심보험) 보장 확대 및 아동·청소년 환대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 서울시는 시민 참여형 저당 환경 조성 사업 '덜덜덜 원정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은 여전히 적정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덜덜덜 원정대가 공모·선발 방식으로 운영되어 장기적 안정성이 낮고, 유동적 예산 구조로 인해 행정 환경 변화 시 사업 축소 우려가 있다. 이에 조례로 시민 참여형 당류 저감 활동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시하고 학교 주변·어린이집 대상 시민 모니터링 상시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 협의체 통해 저당 메뉴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하고 모니터링 우수 저당 매장 발굴·홍보 및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6.1 용산어린이정원 폐쇄

① 제안 배경

-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충분한 정화 작업 없이 활용·조성하여 환경

적 측면에서 위험과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주요 이용 대상이 어린이들이고 이용목적이 놀이와 나들이 등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노출에 취약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다.
- 이에 용산어린이정원을 폐쇄하고 정화 작업이 완료된 후에 재조성 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함께 조사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원·주거지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비소(As), 구리(Cu), 납(Pb), 수은(Hg) 등 중금속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되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토양 우려 기준(1지역 공원)의 36배가 넘는 수치다.
- 2022년 6월 정부는 “어린이정원의 관람 시간은 평균 2시간”이라며 “평균적 공원 이용 형태인 주 3회, 1회당 2시간 공원 내 체류로는 인체에 위해성을 미치지 않는다”며 ‘매년 350일씩 25년 동안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해성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23년 5월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고 15cm 이상의 흙을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했기 때문에 오염 물질과 접촉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 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정부는 토양을 완전히 교체하거나 정화하는 대신, 오염된 흙 위에 15cm 두께의 새 흙을 덮고 잔디나 매트를 까는 방식을 택함. 이런 경우 잔디가 패이거나 흙이 유실될 경우 하부의 오염 토양이 비산 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다. 나무 등의 뿌리가 15cm 보다 깊게 내려갈 경우, 오염 물질을 흡수하여 지상부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
- 이처럼 오염 물질 자체가 제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오염토양의 정화의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서울시와 용산구는 오염물질이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에 용산어린이정원 폐쇄를 공식적으로 요구

[정책2] 서울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다시 토양 및 수질 조사, 오염물질에 대한 위험도 조사를 실시

[정책3] 용산어린이정원을 자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모니터링'을 실시

6.2 아동·청소년 차별하는 노키즈존 없는 서울시

① 제안 배경

- 노키즈존이라는 단어는 2014년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것으로 여겨짐. 정확한 전수 실태 조사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언론 보도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은 인구구조상 서울과 수도권에 특히 밀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 외국에도 유사한 성인 전용 공간들이 존재하나 한국의 경우 노키즈존이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는 양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린이에 대한 혐오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노키즈존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출입제한' 업소 등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는 반면, 노키즈존은 대개 어린이·청소년(또는 그 보호자)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다른 고객들이 어린이·청소년을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노키즈존은 법적 근거 없이 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되며, 따라서 연령 기준도 업소마다 제각각이다.
- 노키즈존은 사회적 약자 또는 특정 소수자 집단, 또는 그와 동반하는 일행들에게 일괄적으로 출입·이용을 거절하는 형식인 탓에 직접적인 차별과 배제이다.
- 이에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당에서 9세 아동의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하여 모든 아동의 이용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에서 노키즈존 관행에 우려를 표하고, “아동이 상업 시설을 포함한 공공장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강조하고 있다.
-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차별적 경향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적으로 약 500여 곳 이상의 노키즈존이 파악되고 있음. 서울은 성수, 연남, 한남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 카페와 식당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 과거에는 주로 주점이나 카페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브런치 카페, 오마카세,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되었다.
- 최근에는 연령 제한의 세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단순히 '아이 금지'가 아니라 연령별로 출입을 금지함. 영유아 제한의 경우 12개월 미만 혹은 7세 미만 금지 등, 학령기 아동 제한의 경우에는 10세~13세 미만(초등학생 전체) 금지가 주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 중학생까지 금지하는 '노중딩존' 등도 나타났다.
- 이는 아동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7년부터 노키즈존이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의 영업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또한 노키즈존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아동의 시민권 박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경험하며 배울 권리가 있음에도 노키즈존은 이러한 권리를 차단하고 아동·청소년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들은 노키즈존을 접하며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부감과 상처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다.
- 노키즈존은 이런 소외와 동시에 '특정 집단 배제'의 시발점이 되며 혐오를 확산함. 아동을 배제하는 문화가 폭넓게 용인될 경우 이후 '노실버존(노인)', '노스터디존(카공족)', '노유튜버존' 등 특정 집단을 손쉽게 거부하는 배제의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게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정작 양육자들에게 "아이와 함께라면 민폐"라는 사회적 심리적 낙인을 방치하고 정작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 줄어들도록 것은 정책적·사회적 모순이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 내 노키즈존 존재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 내

노키즈존 즉각 금지

[정책2]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공용 시설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입을 제한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임대료 지원 및 소상공인 대출 등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업소들의 노키즈존 제한

[정책3] 서울시의 업소내 아동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웰컴키즈안심보험)의 보장 강화

[정책4] 아동·청소년이 환대 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6.3

아동·청소년 고당류 섭취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형 식생활 모니터링 체계 내실화

① 제안 배경

- 서울시는 시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덜달달 원정대'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저당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가공식품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이 적정 권고치를 상회함에 따라 소아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미래 세대의 건강권은 시정의 연속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이므로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덜달달 원정대' 사업은 공모 또는 선발 형식으로 운영되어 사업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
- 사업의 예산 구조가 유동적이어서 시장 교체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동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가치보다 행정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 카페, 학원가 주변 식음료 매장의 당류 함량 정보

제공이 여전히 부족하며 시민 참여를 통한 개선 권고의 법적 뒷받침이 약하다..

- 최근 어린이집의 떡 간식류 제공 중지에 따른 다양한 초가공식품들이 간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영유아의 당류 섭취 증가의 위험이 높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아동·청소년 밀집 지역 및 어린이집 급간식 '덜달달 원정대' 모니터링 활동 정례화

- 학교 주변 영양 표시 미준수 사례 및 고당류 음료 진열 현황 및 어린이집 급간식 당류에 대한 시민 점검 상시화하여 실효성 확보

[정책2.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 건강 증진 조례 내 당류 저감 및 시민 참여 지원 근거 구체화

-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당류 저감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시

[정책3. 예산] 아동·청소년 식생활 개선 사업 전용 예산의 독립적 편성

-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덜달달 원정대' 활동과 홍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정적인 보건 예산 확보

[정책4] 민·관협의체를 통한 당류 저감 캠페인 및 교육 확대

- 식품업계와 시민단체, 시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아동 눈높이에 맞는 서울시 어린이집 저당 메뉴 개발 유도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정책5. 예산] 모니터링 결과 기반의 '우수 저당 실천 매장' 인센티브 부여

- 원정대가 발굴한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참여 시민 및 협력 매장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지원으로 동기 부여 강화

- 서울시 여성·성평등 정책은 최근 조직, 실행체계, 재정 기반 전반에서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는 명칭과 기능이 축소되며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되었고, 정책 방향 또한 성평등 실현에서 출생·양육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성평등 정책은 축소되고 성평등 정책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등 현장 기반 실행기관이 통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폭력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피해지원은 축소되었다. 또한 성평등 활동가를 발굴하고 모임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추진되어 온 서울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역시 시정에서 사실상 삭제되었다.
-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면서, ‘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변경되어 정책 목적과 지원 범위가 축소되었고, 지원 규모 또한 감소하는 등 성평등의제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실행기반·재정구조가 동시에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따라서 관련 조례 복원, 여성·성평등 추진체계 복원 및 강화, 실행기관 재구축, 재정 기반 강화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의 지속가능성과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 서울은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친밀관계 폭력 등 젠더폭력 문제가 지역적 특성과 결합해 심화되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체계는 기관 간 협력 부족과 위계적 운영으로 실효성이 낮다. 특히 주거·자립 지원과 상담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장 중심 거버넌스 구축과 피해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제재 체계는 일반 공무원보다 미비하고, 신고·징계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실질적 이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7.1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기능 복원 및 강화

① 제안 배경

- 1995년, 한국을 포함한 189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제규범인 ‘베이징행동강령’에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지방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성평등 관점의 기획·집행·평가·환류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높이고 총괄·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와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 성평등 전담부서의 위상은 그간 ‘과’ 수준에서 국·실 수준으로 확대·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 그러나 서울시는 민선 8기 이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 흐름에 발맞춰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격하하거나 축소해 왔다. 여성을 국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중앙정부의 저출생 위기 담론에 호응하며, 서울시 여성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부서의 기능을 출산 및 양육 중심의 저출생 사업 수행에 맞춰 변경했다.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착 및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젠더정책팀을 신설하고 젠더자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도입한 성주류화 업무와 관련하여 권한 및 인원을 확대하는 대신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약화시켰다. 그 외에도 정책 개발, 성평등 문화 확산, 권익보호 등과 관련하여 구조나 예산을 축소·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실국 차원의 목표를 축소·변경했다. 결국 여성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 환경을 정책적으로 구축해야 할 전담부서는 출산과 양육만을 고려한 저출생,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의 명칭을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순으로 여성과 정책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고, 2024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해당 부서를 2과로 내리고 ‘여성가족정책실’ 명칭 자체에서 정책을 삭제하여 여성가족실로 변경하였다. 양성평등담당관 내 양성평등정책팀의 정책 개발 및 계획 수립 업무는 축소되고 국회 및 시의회 관련 업무, 부서 예산, 기금 운용 등 행정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 양육행복추진반, 저출생정책추진반 등을 거치며 양성평등담당관 주요 업무에 저출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다 2024년 7월 개편을 통해 저출생담당관을 신설하고 1과

에 배치하였다. 성평등 정책을 선도해야 할 부서의 방향성이 바뀌어 독립적 권리주체로서의 여성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양육자로서의 여성이 강조·강화되었다.

- ‘여성권익담당관’을 ‘권익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여성’을 삭제하더니 2023년에는 여성 권익 기능은 팀조차 없애고 양성평등담당관 업무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권익 보호’에 대한 공공의 의지 및 책무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저출생, 영유아, 아이돌봄, 아동, 가족에 이르기까지 부서 내 대부분의 업무가 여성의 ‘가족 내’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사회 분위기 조성, 인권 증진 및 인식 개선 등 서울시 외국인주민을 포괄하는 정책을 담당했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가족다문화담당관으로 변경되었다가 해당 업무가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되고 오직 ‘가족’에 국한된 정책 중심의 부서가 되었다.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민하는 정책보다는 결혼식 지원(결혼문화팀), 아이돌봄업무(돌봄사업팀) 등 기존 이성애 중심의 가족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이 되었다.
-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된 젠더전문관은 양성평등담당관 하위 ‘팀’과 동일한 층위로 배치되었다가 2024년 이후부터 양성평등문화팀 소속으로 편제되었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가능했던 업무 범위 역시 성주류화 제도 관리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 서울시의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성평등위원회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젠더폭력예방, 안전분과위원회(2022)’, ‘교육·문화분과위원회(2021, 2022)’, ‘노동돌봄분과 회의(2019)’, ‘정책개발분과회의(2017)’, ‘성주류화 분과위원회(2017)’,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2017)’ 등 다양한 분과를 운영하며 정책 영역별 전문적 논의와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명칭이 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된 이후 분과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위원회 회의 또한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실질적인 심의·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㉞ 정책 제안

[정책1] 여성가족실 명칭을 여성가족정책실로 복원하고 여성가족정책실의 비전과 목표를 성평등 실현 중심으로 재설계

[정책2] 양성평등담당관을 1과로 복원하고 관련 업무 범위 확대

[정책3]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조정 기능 강화 및 분과별 위원회 복원 및 강화

[정책4]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 및 담당관제 편제

7.2 성평등 정책 실행기관 복원 및 기능 강화

① 제안 배경

- 민선 8기 출범 이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 센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등 시민과 직접 접점을 형성하는 현장 기반의 성평등 정책 실행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며 성평등 정책의 현장 전달체계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 이는 단순히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 영역을 축소하고 실행 기능을 삭제했다. 그 결과 기존의 법·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 성평등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등 성평등 정책의 실행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2022년 기준)하지만 법·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건 대응, 법률동행 지원, 조직문화 개선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온 서울시 유일의 전문 실행기관이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핵심 정책 인프라로 기능해왔다.
- 실제 예방교육, 조직문화 컨설팅, 사건처리 지원, 법률동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될 만큼 정책 효과성을 인정받아 왔다.
- 그러나 2023년 8월 센터 폐쇄 이후 서울시는 관련 기능을 직장 내 괴롭힘, 일·생활 균형 등과 통합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성희롱·성폭력 대응은 별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통합 운영 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지원, 시민교육, 여성단체 협력 등 성평등 정책의 확산을 담당해온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자 성평등 활동의 가속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그러나 서울시와 시 의회는 성소수자 관련 활동, 페미니즘 교육, 여성단체 연계 활동 등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센터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2024년 결국 폐쇄하였다.

- 이와 같이 시정 전반에서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서울시 성평등 정책은 구조적으로 퇴행을 거듭하였다. 결국 2025년 1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센터 설립 근거(동법 제44조(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삭제하였다.
- 서울시의 지역성평등지수의 '양성평등의식' 영역 순위가 13위에 그치고 있어, '양성평등의식' 영역을 구성하는 3개 지표(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내성역할 고정관념) 모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출처 : 나성은, 박예슬(2025년), 「서울시 청년세대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서울여성가족재단, 4쪽)
- 이와 같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평등 교육, 공론장 형성, 성평등·여성 의제 확산 기능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해온 중간지원조직 인프라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다.

㉓ 정책 제안

[정책1] 성평등 정책 실행기관 복원 및 기능 정상화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기능 복원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 지원 체계 재구축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재설치 및 성평등 의제 확산·시민사회 협력 사업 확대

[정책2. 조례] 성평등 정책 실행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 마련 및 정비

[정책3. 예산] 성평등 정책 실행기관 운영 예산 복원 및 확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정책4]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예방 정책 강화

-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사건대응·법률동행 지원 등
- 성평등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확대

[정책5] 성별 인식격차 해소 및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확대
- 성평등 교육, 캠페인, 공론장 등 시민참여 기반 정책 확산 강화

① 제안 배경

- 2024년 7월 서울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례 전반의 ‘성평등’용어가 ‘양성평등’으로 변경되었고, ‘성평등 기금’ 또한 ‘양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현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은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에 조성된 기금이다. 1998년부터 약 28년간 서울시 성평등 정책의 협력 파트너인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 중심의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이후 여성발전중심 정책에서 성평등과 성인지 관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6년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하면서 기금 명칭 역시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되면 양성평등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축소 되는 등 ‘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가 흐려졌다.
- 민선 8기 출범 이후 서울시 정책에서 ‘성평등’ 가치가 후퇴하면서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재차 명칭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기금의 목적과 용도, 지원규모, 지원 대상 범위가 전반적으로 축소·변형되었으며, 당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지원사업의 취지는 역시 점차 약화되고 있다.
- 이 기금은 본래 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단체의 역량강화와 협력사업을 통해 성평등 촉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을 이유로 기업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정책의 초점이 가족 중심의 협소한 프레임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성평등 의제와 민간 여성단체와의 협력 기반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었다. 현재 기금의 운영 방향은 이러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는 서울시 성평등 정책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 명칭 변경과 기금의 용도가 변경 된 이후 서울시와 여성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과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기업이 추가 됨으로써 기금의 정체성과 방향성 또한 크게 후퇴하였다.

○ 이러한 변화는 기금 규모와 지원 현황, 예산의 변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원단체수는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지원사업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2021년 49개 단체 10억원, 2022년 35개 단체 8억원, 2023년 30개 단체 8억원, 2024년 24개 단체 약 4억 7,700만원, 2025년 28개 단체 약 6억 2천만원, 2026년 26개 단체 약 5억 5천만원

○ 무엇보다 지원분야를 살펴보면, 정책 방향이 '성평등' 중심 의제에서 '탄생·육아 응원', '가족 지원' 등으로 변질되면서 젠더 관점의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출산·가족 중심 정책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과 여성단체와의 협력사업, 민관 거버넌스는 크게 후퇴하였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조례] 기금의 명칭 및 용도 복원

- 제4장 '양성평등 가족 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명칭 변경
- 제41조 1항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으로 복원 및 수행 단위에서 '기업' 삭제

[정책2. 예산] 기금 규모 확대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마련

- 축소된 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정책3] 여성단체 및 성평등 시민사회와 협력 사업 비중 확대

- 민간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 비중 확대를 통해 정책 실효성 강화

[정책4] '가족 지원'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성평등 의제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분야로 재구성

7.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젠더폭력 방지 정책 마련

① 제안 배경

○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심화되는 폭력과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십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서울 지역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5%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감지나 삭제요청은 전국 차원으로 온라인 상 진행되나,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한 이

후, 학교에서의 지원과 교육은 지역적 과제입니다. 서울시 학교, 기관,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사후 재발방지 정책은 지역에서 책임있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 서울 내 유흥지 술과 약물 성폭력, 노년 여성, 1인 가구 대상 스토킹이나 친밀관계 폭력,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안전은 서울지역이 주목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이 높은 임대료의 벽에 막혀 자립이 어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퇴소자립지원금 기준이 2025년부터 상향되었으나, 같은 예산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살기 어렵습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서울시는 스토킹 '전용' 보호시설 개소, 서울디지털성범안심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등을 성과로 내보이나 피해자 지원현장과의 원활한 협력이 실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계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동원하는 방식으로는 거버넌스가 어려우며, 실질적 피해지원을 유기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 서울시 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폐쇄했고, 서울 내 해바라기 센터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부재했고, 이주여성 상담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불안정했던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 서울 내 일부 구청에서 시작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친밀한관계 내 젠더폭력을 가정 문화로 협소화하거나, 위기 대응을 경찰이 아닌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의 경우 1년 이상) 입소한 피해자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신규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만 해당되어 그 수가 희소하고,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어 입주권을 획득하기 어려워 실효성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젠더폭력 지원 정책마련시 현장 의견 청취 및 평등한 거버넌스 구축

[정책2. 예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등 이주민 상담, 지원 거점에 대한 예산 확충

[정책3. 예산] 서울 내 여성폭력 피해지원상담소 및 쉼터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정책4. 예산] 여성폭력 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자립홈, 사회적 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및 예산 마련

7.5 시의회·구의회·선출직 공무원 성폭력 예방

① 제안 배경

- 지난 7기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성폭력을 자행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는 다수였습니다. 일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적용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시 결격사유 기준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 선출직 공무원이나 의원이 지역 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성희롱, 성폭력 행위 후 제재가 없는 것이 피해자와 지역 주민, 지역 인식 및 문화에 미치는 문제는 매우 큼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에서는 6의3항에 따라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6의3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야 직을 상실하며, 이 과정까지도 어렵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제18조 성희롱 금지 조항과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에 대한 신고접수가 쉽지 않고 신고를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동료의원들이 다루다보니 정치적·정파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구의회, 시의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높은 수준의 여성폭력 예방 교육

[정책2] 지방의회 행동강령 실질적 실행을 위해 의회 개원 시 시민대상 계획 공표 및 특별위원회 설치

- 서울시는 지난 몇 년간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자립생활권리 등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권리들을 예산과 행정의 이름으로 후퇴시키며 장애인권리를 구조적으로 약탈해왔다.
- 이 요구안은 그렇게 서울시가 약탈해간 권리를 장애인의 힘으로 되찾고,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복원하자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 또한 내란 이후 정권교체를 넘어선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대한 응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살 수 있는 민주주의가 서울에서 실현되어야만 서울에서도 내란을 극복하고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 요구안은 개별 사업 몇 가지를 되살리자는 수준을 넘어, 시설수용과 통제, 선별과 배제를 정당화해온 서울시정의 방향을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라는 정치적 요구이기도 하다.
- 결국 우리는 약탈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을 넘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그동안 지역사회의 주변부로, 민주주의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서울의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고 확장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8.1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 및 일일운영 16시간 보장을 위한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확보

① 제안 배경

-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장애인콜택시

는 365일 24시간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예산을 문제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원활하고 안정적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우선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2.5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2025년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의 최대 대기시간은 약 5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평균 대기시간이 32분인 데 비해 최대 대기시간은 4시간 58분으로 그 격차가 매우 커 탑승시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서울시는 2025년 1월 특별교통수단 699대에서 9월 818대로 증차하였으나, 운전원은 17명 증원한 835명에 그쳐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는 1.17명에서 1.02명으로 감소했다.
- 이에 따라 보유 차량이 많아도 운전원이 없어 운행률이 전체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699대 보유 시점에도 최대 동시 운행이 394대(56%)였고, 심야에는 2대만 운행되는 시간대도 있었다. 장애인콜택시의 길고 들쭉날쭉한 대기시간으로 인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용자 취소 건수는 26,248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97%에 달했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예산] 2026년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서울시비 2명/국비 0.5명)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

구분	내역	요구 예산
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1,646명 × 56,537,322.5(연)(퇴직금 포함)	93,060,432,835원

※ 산출 근거

- 정규직 운전원 1인 인건비: 56,537,322.5원(26년 기준)
- 필요인원 산출: 특별교통수단 차량 818대(25년 9월 기준)*2명=1636명

① 제안 배경

- 서울형 권리중심일자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 2020년 260개에서 2023년 400개 까지 확대되며 제도로 자리잡았는데, 2023년 참여했던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해고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권익옹호 직무로 최종중증장애인들이 불법집회에 동원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며 권리중심노동을 왜곡·편향하는 데서 나아가 집단해고했다.
- 서울시의 일방적 해고 이후, 일자리 연계의 명분으로 ‘서울시 장애인 특화일자리’ 사업을 신설했으나 해고노동자 중 특화일자리로 연계된 노동자는 단 3%에 불과했다. 어떤 일자리로도 연계되지 못해 결국 무직 상태에 이른 이들은 최소 1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 이에 2023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최종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을 요구한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기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로,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직무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025년 전국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9개 광역, 4개 기초, 147개 단위, 노동자 1,521명
 - 서울시, 장애인단체,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19.8월~'20.5월).
 -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20.5월).
 - 서울형 권리중심일자리 260개를 추진했다('20년).
 - 서울형 권리중심일자리 275개를 추진했다('21년).
 - 서울형 권리중심일자리 350개를 추진했다('22년).
 - 서울형 권리중심일자리 400개를 추진했다('23년).
 - 서울형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폐지했다('23.12월).

-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종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 복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약칭: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활동이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예산] 2023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철회 및 원직 복직을 위한 예산 마련

구분		내역	요구 예산
참여자 인건비	시간제 (주20시간)	400명 × 1,114,560원(월) × 13개월(퇴직금 포함)	5,795,712,000원
참여자 운영비		400명 × 111,456원(월) × 12개월	534,988,800원

※ 산출 근거

- 최저시급('26년) : 10,320원
- 월급여 = 최저임금 × (월 근로시간 + 주차수당 + 월차수당)
 - 월 근로시간 : 4시간 × *22일 = 88시간
 - 주차수당 : 4시간 × 4일 = 16시간
 - 월차수당 : 4시간 × 1일 = 4시간
- 운영비 = 시간제 노동자 1명 월 급여 × 10%

8.3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복원

① 제안 배경

- 2022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탈시설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였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장애인과 최종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시설 중심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는 역행적 행보를 보여왔다. 이의 연장선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탈시설을 역행하는 흐름은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과 참여를 명시하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로 반복해서 확인해왔다.
- 따라서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조례를 재제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 복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핵심 과제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복원

8.4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립연계 사업 복구

① 제안 배경

- 서울시 관할 전체 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묶는 네트워크형 자립연계 사업이 중단되어 시설장애인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시설장애인이 탈시설·자립할 수 있는 연결망을 복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의 복원은 필수적이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은 탈시설당사자와 시설 내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만나 탈시설부터 지역사회 자립까지 지원하는 연결통로다. 시설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주거·활동지원·동료지원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의 실무가 위 사업에서 진행되어왔다.
- 서울시는 거주시설 연계사업 19억 원(2023년 기준)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설장애인 마중물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2024년 ‘거주시설 자립생활 강화’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화 예산에 시비 4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 이는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가로막는 환경적, 의사소통적, 절차적 장벽을 추가하는 것이

다. 따라서 정책적 장벽을 제거하고 시설장애인이 탈시설 지원에 보다 쉽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도록 추동하기 위해서라도 본 사업은 복원되어야 한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예산] 서울시 관할 전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립연계 사업비 복원

구분	내역	요구 예산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비	60개소 × 1,000만원(연)	600,000,000원

8.5

장애인도 시민으로 자립하는 민주주의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전수조사로 인한 추가 지원 탈락자 대책마련

① 제안 배경

- 2023년 3월, 서울시는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3,475명을 대상으로 한 일제조사 결과, 389명의 지원을 중단했다. 이 중 41명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48명은 지원 시간이 감소되었다.
- 중지·삭감 사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문서화하여 통보한 것이 아니라 전화나 구두로 통보되거나 사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사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활동지원 삭감·중단을 겪어야 했다.
- 따라서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지원 중지 및 삭감된 389명의 개별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사각지대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의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서비스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 예산을 확대해왔다.

- 지역사회 자립생활서비스 예산은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일대일 지속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 다대다 지원을 하는 시설보다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식 시설수용 정당화 논리였다.
- 이의 일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대상자들을 상대로 일제조사를 급작스럽게 펼쳤다. 장애인 당사자를 부정수급자로 낙인찍으며 서비스 중단과 삭감을 통한 예산 절감을 의도한 조사였다.
- 이의신청 과정 또한 복잡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중단·삭감에서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당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는 단 4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후 당사자들은 이때 발생한 급작스러운 지원 공백으로 지금까지도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서울시 전수조사로 인한 시추가 지원 탈락자(389명) 대책마련

- 2026년 지방선거는 서울의 자치 정책이 '실질적 주민 주권'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지난 시기 서울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정책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의 참여 통로는 차단되고 풀뿌리 자치기능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극복하려는 열망은 지난해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보여준 주권자들의 목소리와 맞물려, 이제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라는 시대적 요구로 확장되고 있다.
- 새로운 민주주의의 요체 중 하나는 주권자의 권한을 얼마나 이양해 오는가에 있다. 시민 참여가 단순 자문이나 구색맞추기를 넘어 예산과 정책결정, 집행과 평가, 환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세 환원 자치 예산제나 개방형 동장 임용제, 주민총회의 법적 권한 강화 등이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일한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생활 현장의 문제는 교차적으로 발생하기에, 특정 부서나 지역의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파편화된 지원 체계를 넘어 마을(지역)과 자치, 기후위기 대응, 통합돌봄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통합적 정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정책적 연계성이 확보될 때 지역 사회는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되고,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9.1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를 통한 서울형 풀뿌리 자치 실질화

① 제안 배경

-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주권자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제도 정비와 실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주민이 생활권 의제를 논의하고 공공정책과 연결하는 실질적 기반으로 서 주민자치회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서울은 1인 가구 증가, 초고령화, 돌봄 수요 확대, 기후위기, 지역 내 불평등 심화 등 복합적 생활문제가 교차된 대도시이다. 이러한 과제는 행정의 일방적 전달체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동 단위에서 주민이 문제를 발굴하고 숙의하며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는 생활권 자치 구조가 강화될 때 보다 지속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주민자치회 정책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예산 대폭 삭감('21년 202억 → '22년 96억 → '23년 0.3억 → '24년 11억 → '25년 6억)과 사업축소 등을 통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 핵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임을 자처했던(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예산 편성 및 집행권 수행 등) 주민자치회는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러 주민참여의 효능감이 낮아졌고, 주민자치의 공공적 위상도 약화되었다.
- 주민총회 결과가 실제 행정과 예산에 연결되는 구속력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으로 주민의견이 제도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및 자립성, 독립성,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를 동 단위 생활권 의사결정 기반으로 실질화하는 전면적 조례 정비 및 서울시주민자치 종합계획 수립.
-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의제 발굴 및 숙의,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기능을 법적으로 명시.
- 주민총회 등에서 논의되고 수립된 주요 안건이 휘발되지 않고 자치구와 동 행정이 공식적으로 검토·반영 및 회신하도록 제도화.

[정책2]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확충.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적 재정적 상설 기반 마련. 보조금 의존 구조 탈피, 제도에 걸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편성→주민세(개인분) 환원사업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 주민자치,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개방형 동장 임용제 시범운영.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도 동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음.
-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한 동단위 현장 지원체계인 '주민자치 지원단' 구성.
- 자치계획 수립 등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 교육 확대.

- 지역 조건과 특성을 반영한 ‘서울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정책3] 주민자치회 간 연합 활동의 보장 및 지원

- 25개 자치구 주민자치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회 간 연합·연계 활동으로 자치 역량 확대·강화.

9.2 풀뿌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기반 확충

① 제안 배경

- 기후위기, 돌봄, 양극화, 사회적 고립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호혜적 관계망은 매우 취약하다. 이같은 위기의 시대에 풀뿌리 지역공동체는 공통의 생활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회적 안전망이자 지역문제 해결의 토대로서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 지역공동체 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의 주요한 축으로써 지난 10여년간 서울시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확장돼 왔지만 오세훈 시장 임기동안 관련 조례 폐지, 예산 삭감 등으로 축소, 정체되었다. 2026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풀뿌리 공동체 운동의 비전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지역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기반과 지원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사회연대경제, 마을교육공동체, 돌봄, 공동체미디어 등의 지역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민주체의 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지역은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단위이지만 청년, 1인 가구, 고령층, 이주민 등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공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 마을공동체 사업 중단으로 인한 현장활동가들의 이탈과 중간지원체계의 약화 그간 쌓아온 전문성의 단절과 사회적 자본의 손실을 낳았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 풀뿌리 지역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지원체계 정비.(행정의 책무, 전담부서, 지원기관, 재정지원 근거 등 포함)
- 서울시 중장기 종합계획, 자치구 시행계획, 동 단위 실행계획이 연계되는 체계 구축.

[정책2] 주민참여·주민주도 풀뿌리 지역 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

-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사회연대경제, 마을교육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돌봄, 기후위기 대응 활동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역생태계 지원체계 마련.
- 서울시-자치구-동 단위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현장 지원,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연결 기능 수행.
- 주민학습, 자치학교, 의제발굴 워크숍, 예산학교 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공동체 코디네이터, 미디어 활동가, 주민학습 촉진자, 돌봄 매니저 등 공동체형 사회적 일자리 육성을 통한 현장 생태계 복원 및 강화.

[정책3] 다양한 주민 공동체활동 거점으로서 공유공간 확대.

- 주민 생활권 단위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공유공간 확보.
- 동네 단위 공유공간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공간 공유 활성화.

[정책4] 지역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 지역밀착형 쌍방향 소통을 위해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미디어 채널 활성화 및 '공동체 라디오방송'의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통한 미디어 자치역량 강화.
- 지역 단위 공동체미디어 종합지원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9.3 공동체 회복력 강화를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① 제안 배경

- 2026년 3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제정된 일명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되었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과 지역 내 자원 연계는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

- 법은 시행되었지만 상당수 조례는 주민참여 보장, 비영리·사회연대경제 기관 위탁 근거, 돌봄 자원 조정 기구, 재정지원 기준 등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빠져있어 서울시 및 자치구 단위 조례 제·개정 촉진이 필요하며 자치단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구조의 방향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시급하다.
- 특히 최근 노령화, 기후위기, 1인가구 급증, 양극화, 불평등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질 의제가 아니며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시행돼야 함을 역설한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통합돌봄 정책은 서비스 항목과 예산은 늘어났으나, 돌봄서비스의 민간업체 위탁 확대가 이뤄지고 있어 공공성 약화, 서비스 질 저하, 돌봄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 양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상당수 조례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부재하다. 특히 주민이 돌봄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절차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공동체 등의 비영리 사회연대경제 기관을 위탁 기관으로 명시하는 근거, 돌봄 자원을 조정하는 지역기구의 운영 근거가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 공급은 시장 중심 민간업체에 집중되고 주민은 수혜자에만 머물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특히, 서울시는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앞세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함으로써 필수 공공서비스인 돌봄을 시장에 맡기는 우를 범했다. 과도한 민간업체 중심 운영은 돌봄의 파편화를 가져와 사각지대 발생, 기피영역 방치, 노동조건 악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공공의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돌봄재정은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이 이뤄지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와 이에 대응된 자원의 격차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거주지별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서울시 및 각 자치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개정 추진

- 예산 편성, 민간 위탁 계약,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개인정보 처리 근거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 법적 근거 마련.
- 돌봄 시장화 막기 위한 주민 및 사회연대경제 참여 조례안 제·개정.
광역-기초간 정책전달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도록 광역뿐 아니라 기초 조례에도 주민참

여 보장과 비영리·사회연대경제 기관 위탁 근거 명시하도록 추진.

[정책2] 서울시와 자치구 연계, 통합돌봄 공공 인프라 구축

- 돌봄은 국가가 제공하는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서비스가 아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시장의존형 돌봄구조를 축소하고 보편적 서비스 기반의 통합돌봄 공공전달체계 확충.(공공 비중 OECD 평균 30%까지)
- 의료, 복지, 주거, 요양 등 부문간 연계를 위한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횡적체계)과 서울시와 동단위까지(종적체계) 시-구-동으로 이어지는 거점형 공공 인프라 구축 필요. 특히 동단위의 독립적인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립 필요.
- 돌봄자원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 플랫폼의 고도화.
- 지역별 자원 및 예산 차이로 인한 통합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부족한 자치구에 우선 재정 투입하는 '균형지원 전략' 마련.

[정책3] 통합돌봄 민관협력 모델 정착

- 공공 인력만으로는 돌봄의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섹터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민관협력 모델' 정착 및 지원.
- 지역공동체기반의 '비영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으로 공동체 자원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거점기관 역할하도록 지원.

[정책4] 통합돌봄 거버넌스에 주민, 돌봄노동자 등 당사자 참여 보장.

[정책5]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 돌봄노동 강도가 적지 않은데다 전담인력이 여전히 기간제나 계약직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노동개선 보장 필요.
- 한시적인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 통합돌봄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전문 인력을 정원 내 확보.
- 서울시가 돌봄노동과 관련, 고용형태, 임금, 교육 훈련에 대한 공공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정책6] 지역돌봄 인력 양성

- 돌봄 인력풀 운영 및 재교육, 훈련 등.

[정책7] 지역기반 돌봄 공간 확대

- 지역사회 다양한 성격의 '주민공간'에 통합돌봄 관련 사업 및 활동 유치로 '서로돌보는 동네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
- 동 단위 공유식당, 노인요양원, 쉼터 등 지원.

① 제안 배경

- 기후위기 대응에는 국가 단위의 거시적인 기후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은 일상의 삶이 위기와 연결된 곳으로 매우 직접적인 기후위기 현장이다. 위기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터인 '마을'에서 발생하므로 풀뿌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어야 한다.
- 기후위기는 주거, 노동, 돌봄, 건강, 먹거리, 인권 등을 포괄하는 범분야의 문제이므로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광역과 기초의 상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감축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적응을 위한 서울시-자치구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 특히 26년 지방선거는 서울시가 2050넷제로로 가는 중간 경로인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시기에 열리므로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필요하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기후위기는 환경, 교통, 도시계획, 복지, 재난안전 등 부처를 넘나드는 통합적 문제이며, 온실가스 감축이나 적응에 있어서도 광역-기초간의 정책 조율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부처간 칸막이 행정이나 광역, 기초의 파편화된 정책으로 효과적 대응이나 추진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원팀'을 구성하여 상설적인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확보 미흡, 단기성과 위주,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실적 보고용' 협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은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대다수 자치구에는 이를 총괄할 전담 국·과 단위의 조직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여 자치구별 감축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나 피드백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광역-기초 모두에 지방정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 각 부처 부서를 넘나들며 통합적 관점에서 대응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메타 기구 설치 제도화.

[정책2] 광역-기초간, 기초-기초간 연계되는 '기후통합 협력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상설 기후위기 협의체' 제도화. 서울시 기후현안, 지역에너지 계획부터 목표 할당, 예산, 기후재난 대응에 이르는 공동 논의.
- 광역과 기초를 연결하는 기후재난 안전망 강화. 통합돌봄체계와 연계.

[정책3] 기초지자체의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배분

-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후대응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의 지원 확대를 통해 자치구가 능동적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하도록 독려.

9.5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서울시시민참여위원회' 설치

① 제안 배경

- 대의제의 한계가 체감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은 더 이상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정책의 기획·수립 및 시행·평가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갈등 비용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으로 확장돼야 할 과제이다.
- 서울시는 특히,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민의 요구와 권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부침을 겪어왔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시민참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절실하며 법·제도적 권한이 보장된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쓰레기 소각장, 재개발 및 주거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복잡한 교차적인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메타도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행정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다수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결합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서울시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다수의 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 중심이며 이 또한 자문기구 성격이 강해 실질적인 시민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하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역시 절차적인 고려 중심이거나 찬반 투표 등의 단순 참여에 치중돼 있을뿐 특정 의제나 정책에 대해 충분한 정보 공유와 토론을 통한 숙의의 장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기존의 각종 위원회는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이나 풀뿌리 현장의 활동가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통로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특정 계층이나 소수 전문가의 의견이 시민 전체의 의사로 과잉 대표되었으며, 청년, 1인 가구,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주권자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낳았다.
- 시민참여기구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데 있다. 행정의 보조적 참여자로 그치며 오랜 시간 숙의한 결과물이라 해도 행정이 수용하지 않으면 시민공론은 요식에 그치게 된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서울시 시민참여·숙의·활성화 전담체계로서 시민참여위원회 상설화

- 시장 직속의 상설 거버넌스로, 서울시 정책 결정과 행정 수행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 부문 시민참여와 의제 숙의를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기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거버넌스로 제도화 필요.
- 서울시민 참여보장과 민주적 숙의, 서울시민참여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조례 제정
- 구성은 서울시 부문 또는 주요의제 중심으로 분과를 두며 산하에 숙의 플랫폼 운영함.

[정책2] 숙의공론 플랫폼으로서 위원회 산하 '서울시민의회' 운영 및 제도화

- 성별, 연령,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된 '시민의회' 모델 도입, 대표성 확보.
- 시정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학습, 전문가 토론, 시민 분임 토의를 거치는 숙의 프로세스 의무화.
- 시민의회 권고안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 확보 필요.

[정책3]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허브 구축

- 일반 시민들이 정책 제안 기법을 배우고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지원 센터 운영.

- 서울은 지난 몇 년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각종 수변·랜드마크 개발로 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책무에서 점점 멀어졌다. 2030년 기후 임계점을 앞둔 지금 이 역행을 멈추고 도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강과 도시 녹지는 관광·부동산 개발의 배경이 아니라, 폭우·홍수·폭염에 대응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이자 시민 모두의 생명선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 한강을 '교통 수단'과 수변 상업지구가 아니라 자연성이 회복된 생명의 강으로 재정립하고, 콘크리트 호안과 보 등 직강화 구간을 단계적으로 자연형 하천·습지·홍수범람원으로 전환하여 생물다양성과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한강 - 지천 - 도시숲을 잇는 연속적인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수상교통·수변 상업시설에는 구역별·구간별 총량제와 생태·기후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과밀 구간 신규 허가는 중단하는 등 난개발을 제어하는 강력한 규범과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10.1 한강 자연성 회복 : 교통 수단에서 생명의 강으로

① 제안 배경

- 한강은 서울의 핵심 생태축이며 도시 생태계와 기후 대응의 중요한 자연 기반 인프라다.
- 그러나 최근 한강 정책은 한강버스, 크루즈, 수변 상업시설 등 수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중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이 정책 기조는 수변 개발 압력을 증가시키고 하천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이에 따라 한강을 교통·관광 인프라 중심 공간이 아닌 자연 생태계와 기후 대응 인프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② 현황 및 문제점

- 수상교통 및 관광 중심 정책으로 선착장, 수상시설, 수변 상업시설 등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 제방과 보, 콘크리트 호안 중심 하천 관리로 자연형 하천 구조와 습지 등 서식 환경이 감소하고 있다.
- 한강과 지천, 도시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 둔치 공간이 상시 이용 공간 중심으로 조성되면서 홍수 대응을 위한 범람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수상교통·수변 상업 난개발 억제와 재조정

- 수상교통·수변 개발 총량제 도입 : 선착장·수상시설·수변 상업시설에 대해 유역·구간별 총량 상한을 설정하고, 한강 전체 생태·경관·기후 영향 평가를 거친 후에만 신규 허가를 허용. 이미 과밀한 구간(여의도·반포 등)은 신규 시설 허가를 중단하고, 일부 시설은 단계적 축소·이전 계획을 수립
- 수상교통의 역할 재정의 : 정시성·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출퇴근 대체 교통’ 기능은 폐지하고, 기존 소규모 레저활동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편. 환경 부하를 평가해, 전기·저소음·저파랑 선박으로 전환하며 운항 시간과 구간을 생태 민감 시기 및 구간과 분리

[정책2] 자연형 하천·습지·홍수범람원 복원

- 제방·호안 구조 전환 : 콘크리트 호안·직강화 구간을 단계적으로 자연형 호안과 완만한 수변 경사, 모래톱·갈대밭 등으로 전환해, 어류·조류·수생식물 등 서식처를 회복하고, 흐름을 막는 횡단 구조물을 단계적으로 철거. 산책로·자전거도로는 홍수 시 침수·이설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 강이 범람할 공간을 확보하고 구조물은 후퇴 배치
- 지천 합류부·범람원 생태복원 : 중랑천·탄천 등 주요 지천 합류부를 우선 대상으로, 합류부 주변을 홍수범람원·저지대 습지로 복원해 생물다양성·홍수 완충 기능을 높임. 저이용 수변공간을 전환하여 ‘도시형 범람원·습지공원’으로 조성하고, 계절별 수위 변동을 허용하는 탄력적 관리 방식을 채택

[정책3] 한강-지천-내륙녹지를 잇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 한강-지천-도시숲 연결축 : 한강과 주요 지천·도시숲·공원을 잇는 동서·남북 생태축을 도시기본계획 상위 원칙으로 명시하고, 도로·철도·개발 사업에서 단절을 최소화하는 생태통로 설치 의무화. 철도교·도로교 하부와 제방 상부에 수목·초지·수변식생을 연속적으로 조성해, 조류·양서류·소형 포유류의 이동을 고려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정책4] 기후적응형 수변공간과 물 순환 회복

- 홍수·폭우 대응 수변공간 재편 : 제방 안쪽 둔치를 '상시 이용 공간'이 아닌 '홍수 시 잠기는 공간'을 전제로 설계해, 시설물은 가변형·이동형으로 최소화하고 자연지형·식생을 중심으로 조성. 기후위기 시대 빈번해지는 국지성 호우·홍수에 대비해, 하류·함류부·곡류부에 우선적으로 범람원·저류지를 확보하여 도심 침수 리스크를 낮춤
- 도시 물 순환 도시와의 연계 : 빗물분산저류시설, 투수포장, 빗물정원 등을 한강 유역 전체에 확대해, 빗물이 빠르게 하천으로 쏟아져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 전반의 물 순환을 회복. 정수·하수·우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한강 취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춤

10.2 수영하는 한강, 시민이 가꾸고 운영하는 한강

① 제안 배경

- 한강은 서울을 동서로 41.5km를 가로지르며 면적은 39.9km²로 서울시 면적의 6.7%에 해당한다.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을 포함하면 서울시 면적의 10.3%가 하천이고, 이들은 도시의 한 가운데 또는 주요 위치에 존재한다.
- 따라서 한강과 하천의 구조와 이용을 바꿔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장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강' 정책은 새로운 한강에 대한 담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③ 정책 제안

[정책1] 시민이 가꾸고 운영하는 한강

- 시민은 공공시설의 이용자이지만, 다양한 이용 소감과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서비스 개선에 참여함으로써 운영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외국에서 행정재산의 유지관리에 비영리단체와 시민들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도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행정재산의 유지관리에 노하우를 가진 비영리단체나 시민모임의 참여가 어려움
- 한강과 하천의 경우 공유지일뿐더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어 시민 참여와 운영이 유리하므로 시민참여 또는 민간 위탁 방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시장에 자산이 과도하게 공급되었던 버블경제 후 불황을 겪으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시행(2003년 9월)하였음. 지정관리자제도는 공무(公務)를 시장(민간)에 개방한 사례로 과도하게 늘어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대적 요

청이자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음.

[정책2] 수영하는 한강, 모래밭이 펼쳐진 서울

- 파리지의 안 이달고 전 시장의 '보행자 중심·친환경 도시'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는 '파리 플라쥬(Paris Plages, 파리 해변)'인데, 세느강의 수질을 개선해 올림픽 수영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정책의 새로움으로서만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음.
- 한강의 자연성회복, 한강의 시민성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이제 '수영하는 한강', '모래밭이 펼쳐진 서울'을 위해 서래섬/반포, 잠실, 여의도, 난지, 이촌 등에 모래밭을 만들 수 있음
- 한강에서는 1960년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의 700배에 해당하는 모래밭이 있었고 20만명의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겼으며, 그 때 모래밭의 1/100 수준, 파리시 해변(70m x 20m)의 100배에 해당하는 모래밭을 만들자.

[정책3] 한강과 서울 하천들의 자연성 회복과 시민 이용의 균형 도모

- 한강과 하천의 넓은 면적과 네트워크형 구조를 고려할 때, 보전과 이용의 조화는 가능하고, 충분히 이용하는 속에서도 보전의 공간과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한강의 장소성,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해 자연성 회복을 적극 추진하되 기존의 시민 이용과 적절히 타협할 수 있음
- 참고로 셋강생태공원은 최근 5년 사이 이용객이 5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연기반해법으로 관리하면서 생물다양성도 크게 높아졌음을 볼 때 공간 계획을 새롭게 하고, 이용문화를 개선한 것 등으로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추구할 수 있음

[정책4] 한강버스, 노들섬 사업 등 전시 토목 사업 전면 백지화

- 전임 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노들섬 예술섬 개발 등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환경, 안전, 경제성, 행정 절차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바 엄정한 평가를 거쳐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

[정책5] 미래한강본부의 개편, 한강시민위원회의 재구성

- 개발과 토목 중심의 한강 정책을 폐기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강을 가꾸고 즐기는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한강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과잉 개발을 구조화하는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의 해체를 검토해야함
- 관리와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와 문화의 육성, 시민의 참여와 만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서울시 출자조직인 한강재단으로 재편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의 한강시민위원회를 개혁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인데 한강 정책의 재수립, 관리 조직의 개혁, 시민 참여의 확대, 자연성 회복과 시민 이용의 균형, 관리 체계의 개편,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다룰 수 있게 재구성해야 함.

11.1 원청교섭 보장 및 지자체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① 제안 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를 일선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지역 시민의 삶과 밀착된 복지증진 업무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보호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개정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입법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노동자가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위탁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노동안전 등에 대한 단체협약안을 체결해야 함.

②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시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를 지자체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2018년 정부가 민간위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의 87.2%가 지자체에 속해 있고 그 규모는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2018년 민간위탁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영역은 제외되어 있어 돌봄 및 사회복지영역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것임.
- 민간위탁 노동자는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로서 지자체와 민간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정해지는데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조건 열악성이 고착된 상태임.

③ 정책 제안

[정책 1]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실현

- 자치단체장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실질사용자로서 민간위탁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 응락 및 단체교섭 성실진행, 단체협약 체결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설립-지원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진행

[정책2]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역할 강화

-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정례적인 노정협의·노정교섭 구조 구축
- 민간위탁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감독 상시화
-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의 직영화로 노동자 직접고용
- 민간위탁 노동자의 인건비 구분지급 및 적정임금체계 마련

11.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산업·업종별 노동거버넌스 구축

① 제안 배경

-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소득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으로 일자리 확대, 기업 유치 등에만 초점을 맞춘 서울시와 지자체의 산업·일자리 정책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함.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정책이 전부였던 오세훈식 정책으로는 미래 지향적 노동, 산업 행정을 구현하기 힘들
- 청년, 여성, 고령 노동자들이 접할 수 있는 일자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착되고, 비정규직 및 비정형(비전형) 노동인구가 취업인구의 절반을 넘어가면서 상시적 고용 불안이 만연한 가운데 단지 노동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음. 대안이 될만한 '노동이 있는 산업정책', '도시형 노동행정' 모델이 필요함

②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정부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라 일반·도시첨단·농공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고 노동자가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책임을 지니고 있음.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가동업체 12,871개, 고용인원 141,233명 (2023년 기준, 주요 국가 산업단지 산업 동향 자료) 규모로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지역이다. 또한 50인 미만 작은사업장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매우 낮은 편이라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요구되는 곳임.
- 하지만 산업단지의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으며 인프라나 편의시설 개선 등을 논의하는 관리기 관협의체 운영에도 노동자의 실태와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봉제, 인쇄, 제화,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역시 대부분 영세한 규모와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로 인해 불법이 만연하는 등 도심제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③ 정책 제안

[정책1]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서울시 산업단지 정책심의회와 관리주체협의체 등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서울시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노동권 강화 방안 반영

[정책2] 산업단지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자 지원

- 서울시 관할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권 보장 및 노동자 편의시설 확충 방안 마련
- 산업단지 초기업교섭 사례 발굴 및 지원
- 산업단지 노동자 조직 지원 및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자가 건강 진단 세트 설치

[정책3] 산업단지·중소사업장 밀집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방안 수립

- 노동정책 자문을 위한 산업별 협의체 운영 및 협의기구 설치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서울도시제조업 노동정책 관련 해당 노동조합과 상급단체 대표자 등 참석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산업위원회 설치, 지역협약 체결 추진
- 서울특별시 도시제조업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 주얼리노동자 쉼터, 제화·인쇄·봉제 등 도시제조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12.1 현장 중심 민간 주도 지원 생태계 개편

① 제안 배경

- 현행 서울시(광역)와 자치구(기초)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역할의 불분명성, 운영체계, 한정된 예산으로는 성장기, 성숙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동성, 자발성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
- 기존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지원체계를 전면 진단하고 그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정책 기조와 서울시의 현장 자원을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적 혁신 경제의 토대 마련이 필요함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지원 생태계 붕괴: 서울시는 서울시청 사회연대경제 관련 부서의 통폐합*,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삭감, 다양한 지원 사업 폐지 등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둔화 초래
(기존) 사회적경제과→(변경) 공정경제과 內 상생기업지원팀(사회적경제 용어 미사용)
(예산) 사회적경제 관련 '25년 예산은 '22년 대비 80.0%(20,077백만원) 삭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담당부서	노동공정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예산	25,086백만원	19,516백만원	13,432백만원	5,009백만원

- 서울시 및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조직 축소 또는 폐지, 예산 축소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저조로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 부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5년 예산 2,142백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면 지원 사업비는 1,184백만원에 그침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5개소 중 3개 폐지*, 14개 직영으로 전환, 서울시 지원예산은 '22년(약1,722백만원) 대비 73.8% 감소한 451백만원에 그침

* 도봉구, 영등포구, 종로구 / 용산구 등 14개소 직영 / 성동구 등 8개 자치구 민간 위탁

- 위와 같은 영향으로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양적 성장 둔화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가치 창출 확대에 한계 있음. *(‘22) 39개소 → (‘25) 17개소, 56.4% 감소

③ 정책 제안

[정책 1] 자치구지원센터

- 부문을 뛰어넘어 지역사회 관계망과 업종별 전문성을 가진 기초지자체의 연합조직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초기 상담, 기본 교육, 창업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체계 개편

[정책 2] 광역지원센터

- 광역의 지원센터는 서울시 정책에 연결된 전략사업개발, 자원연계, 정책연구, 인프라관리, 제도개선, 행정협력촉진 등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지원기능 수행

[정책 3] 광역 거버넌스 재편

- 포괄적(업종 - 분야-지역 등)으로 구성 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장을 잇고 현장의 경험과 지원센터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시 '민관 통합 협력 플랫폼' 운영

[정책 4] 서울사회연대경제원 설립

-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출연기관 모델을 도입하여 창업, 성장, 투자, 성과 확산의 전주기 지원체계 운영 및 교육 연구 네트워크 지원.

12.2 서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① 제안 배경

- 사회연대경제는 '연대'를 위한 '연대'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역 경제 모델이므로, 사회연대경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기술혁신과 재무적 성과 위주인 기존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투

자-성장-회수 속도와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사회문제를 해결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인내자금 필요)
- 이러한 사회연대경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재무적 성과나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시장금융이 접근하기 어려움.

②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대폭 축소: 광역지자체 중 선도적 역할을 했던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의 폐지* 및 규모 축소**로 중앙정부 재정 지원 삭감과 더불어 금융 접근성이 악화됨
 - * (기존) 서울시사회투자기금 → (변경)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사회적경제계정
 - ** (‘20) 약220억 → (‘21) 160억 → (‘22) 0 → (‘23) 약18억 → (‘24) 50억 → (‘25) 60억
- 민간 중개기관 파트너십 상실: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은 민간 중개기관에게 대표자 인보증 요구, 연체이자 부가 등 높은 리스크를 중개기관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파행적 운영
- 자금 공급 사각지대: 임팩트펀드는 주식회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중진공과 소진공은 영리법인만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
- 정책 환경 변화에 취약한 민간 자생력 구조: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는 시장금융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공공 지원이 축소되면 민간의 자생적 역량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움.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취약성을 단절하기 위해 민간의 자조 역량을 키우고, 공공 지원 의존도를 낮추는 지속가능한 자조 금융 생태계 구축이 시급.

③ 정책 제안

[정책 1] 사회연대경제 기업 공제 마중물 사업을 통한 자조 기금 활성화

- 사회적금융 및 공제 운영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공제 마중물 사업을 추진. 현장의 네트워크 조직이 조성한 자조기금 조성액에 서울시가 2배수 자금을 매칭, 이후 2년간 운영비 지원. 보조금 중심의 지원에서 “자조기금 + 공공 마중물 + 광역 협력체계”로 전환

[정책 2]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전용 기금 설치 및 운영 개선

- 현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용자(중소기업육성자금 내 계정만 분리)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금융을 수행하지 못함.
- 민간 사회적금융 전문중개기관을 통한 통합적 지원 필요. 사회연대경제 전용 ‘사회투자기금’ 재개 및 사회적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용자기업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환유예, 상환기간 조정 등 유연한 운용 가능하도록 해야함

[정책 3] 사회적금융 민간 중개기관 운영 안정화 및 고도화 지원

- 소액, 다건 금융의 연체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손분담, 부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급 여력 확대해야 함.
- 근거 없이 추진된 민간중개기관 대표자 근보증을 폐지하고, 회수불능 채권 상각, 채무면제, 연체이자 구조 개선으로 민간 중개기관 부담 완화가 필요.
- 리스크를 민간 중개기관에게 모두 전가하는 기존 ‘여신거래협약’ 재검토 및 재약정 체결이 필요하며 서울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시급.

12.3 사회연대경제 전담 행정체계 구축

① 제안 배경

- 현행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행정은 과 단위 조직에 머물러 있어,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수립과 실행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
- 행안부·고용부·복지부 등 중앙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 단위의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의 모범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정부 정책은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전환하며 ‘지역기반 문제 해결과 주민참여 중심 모델’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2.0(2019~2022)]이후 3.0 기본계획 미수립 상태임

② 현황 및 문제점

- [부처 간 칸막이 문제]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이 행안부(마을기업·협동조합), 고용부(사회적기업·자활기업), 복지부(돌봄)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서울시 차원의 통합 대응이 어려움. 현행 과 단위 조직으로는 부처 간 정책을 연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현장 조직은 부처별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각각 대응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안고 있음.
- [서울시 내부 부서 간 조정 기능 부재] 사회연대경제와 연관된 서울시 내부 정책(도시재생, 복지, 일자리, 주택 등)이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복 사업 및 지원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전담 국 단위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서 간 조정 권한이 없어 정책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
- [민관 거버넌스 공식 채널 부재] 현장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서울시 정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 구조가 없음. 정책이 현장과 괴리된 채 하향식으로 집행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현장의 요구와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

③ 정책 제안

[정책 1]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 서울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전담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 등 부문영역과 더불어 돌봄, 자원순환, 도시재생, 공정무역과 같은 사업영역의 지원 체계를 일원화.
- 행안부·고용부·복지부 등 중앙부처 정책과의 연계 창구를 단일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서울시 내 유관 실·국과의 협력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및 서울시/지자체/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 우선구매 촉진.

[정책 2] 협치·조정 담당관 신설

- 사회연대경제국 내에 협치·조정 담당관을 두어 서울시 실·국 간 칸막이를 허물고, 도시재생·복지·일자리·주택 등 유관 정책과의 연계를 상시 조율.
- 담당관은 민관 협의 창구를 공식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

[정책 3] 민관 통합 협력 플랫폼 운영

- 업종·분야·지역을 포괄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장 경험과 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시 협의 구조를 운영하며, 플랫폼은 자문 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기획·실행·평가의 전 과정에 민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붙임] 2026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시민사회추진위원회 참여 단체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s://ccej.or.kr>

1989년, 경제정의의 가치를 내걸고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경실련이 지향하는 경제정의는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공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 ❖ **녹색교통운동** <https://greentransport.org>

1993년 설립하여 “시민 교통권의 확보와 녹색 삶터 만들기, 친환경 교통구축”을 목적으로 “도시, 교통, 환경, 에너지, 복지”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 ❖ **문화연대** <https://culturalaction.org>

1999년에 창립하여 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운동단체입니다. 검열과 배제가 없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 문화공공성의 관점에서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 ❖ **서울환경연합** <https://www.seoulkfem.or.kr>

1993년 창립된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를 중심가치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ttps://cfoi.or.kr>

2008년 창립하여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s://action.or.kr>

1999년 창립되어 실천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권력을 감시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력단체) <https://www.civilnet.net>

2001년 창립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36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개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활동가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 ❖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력단체) <https://www.ccdm.or.kr>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는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언론(권력) 감시, 언론 제도 및 정책 대안 제시, 미디어 공공성 실현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언론개혁 및 인권신장에 기여를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후행동 단체들의 연대기구
<http://climate-strike.kr>(전국)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실천과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자치구의 개발사업과 탄소중립 정책을 감시하며, 시민과 마을, 자치구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듭니다.

[회원단체]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동기후위기비상행동, 강북구기후위기실천행동, 관악기후행동, 광진기후모임,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금천기후행동, 기후위기강서행동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_노원지기, 기후위기는평전환연대, 도봉기후위기비상행동, 동대문기후행동, 서울환경연합, 서초기후모임, 성동기후모임, 성북기후행동, 송파기후행동, 양천기후행동, 영등포기후위기비상행동, 중랑기후시민, 학부모시민기후행동36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
<https://sadd.or.kr>(전국)

서울장차연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시 25개 자치구 네트워크들의 연대기구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25개 자치구 네트워크가 결집한 연대 기구입니다. 우리는 시민 참여 확대와 활동가 지원을 통해 기후정의, 성평등, 돌봄이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호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원단체] (사)강북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사)구로시민센터, (사)동그리마을넷, (사)마을, (사)마을인교육, (사)성동마을넷동네, (사)은평상상, (사)종해문화진흥원, (사)중랑마을넷, 강남마을넷, 관악공동행동, 광진주민연대, 너머서,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도봉이어서, 마을협동조합가지가지연구소, 마포다정한재단, 문화플랫폼협동조합시민나루,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위례시민연대,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마을자치교육연구소

정치하는 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 평등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www.sisters.or.kr>

1991년 개소하여 9만 3천여 건의 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통해 성폭력이 성별권력관계와 남성중심적 문화의 문제임을 알려왔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정책·제도의 마련과 개선, 인식변화를 위한 연구와 교육, 쉼터 및 자립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들의 연합체(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
<http://www.women21.or.kr>

여성운동단체 간의 연대와 소통을 도모하고 성평등, 민주·복지, 평화·통일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1987년 창립 이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 돌봄과 복지 실현,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풀뿌리 지역여성운동부터 글로벌 성평등 의제까지, 지역과 이슈, 사람을 연결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머서울

https://www.facebook.com/getoverseoul?locale=ko_KR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한국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 대표 플랫폼

<https://ksenet.org>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생협·신협 연구 및 지원조직, 시민사회 등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람중심의 따뜻한 경제를 만들어 갑니다.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한강과 손잡기

<https://coophangang.kr>

개발 중심의 강과 하천 관리는 생태계 훼손과 공동체 단절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 직접 강을 배우고, 지키고, 기록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작은 참여가 모여 강의 생태를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을 다시 연결합니다.